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1992. 12. 25.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유럽통합과정에서의 진통,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추세속에서 1992년의 世界秩序는 多極化의 방향으로 재편되어 왔다. 동북아 4강의 상호관계에 대립·경쟁적 측면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추세, 일·러간의 영토문제 등 새로운 葛藤要因이 대두함으로써 동북아정세는 過渡期的 不安定性을 띠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에 북한은 만성적인 經濟難을 해소하고 한국의 북방 정책 성공에 따른 外交的 孤立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開放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國內的 波及效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즉,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한 제반 法規를 마련하고 黨指導部와 政務院을 改編하는 등 경제개방을 준비하는 동시에 사상교육과 사회적 統制體制 強化를 통해 주민의 逸脫現象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2년에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부문별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고 3개 分科委員會 및 5개 共同委員會를 구성하였으며 총 90여회 이상의 각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

의 核問題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합의서 발효와 분과위 및 공동위의 구성 등 팔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關係改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脫冷戰的 국제정세의 변화추세에 따라 韓半島 統一環境도 과거와는 달리 질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南北 韓關係의 진정한 變化는 북한내부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에 民族統一研究院은 1992년의 통일환경,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1993년도 정세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1991년에 이어 연례보고서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2~1993」를 발간하는 바, 통일문제 관련 각 기관과 각계 인사들의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992. 12. 25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目 次

I. 統一環境	1
1. 世界情勢	1
가. 國際政治	1
나. 軍事·安保	6
다. 世界經濟	9
2. 東北亞情勢	12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2
나. 東北亞 安保環境	28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35
가. 韓·美關係	35
나. 韓·日關係	38
다. 韓·러關係	40
라. 韓·中關係	43
II. 北韓情勢	47
1. 國內情勢	47
가. 理念과 權力承繼問題	47
나. 經濟事情과 開放問題	51
다. 社會逸脫現象과 統制問題	56
라. 軍事政策과 軍事動向	60
2. 北韓의 主要 對外關係	64
가. 北·中關係	64

나. 北·러關係	67
다. 北·日關係	70
라. 北·美關係	74
3. 北韓의 對南戰略	77
Ⅲ. 南北韓關係	82
1. 政治·軍事 分野	82
가. 和解·協力關係	82
나. 核問題	91
다. 軍備統制問題	95
2. 交流·協力 分野	97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97
나. 社會·文化分野의 交流·協力	102
다. 離散家族問題	106
3.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08
부록 1992年度 主要事件日誌	113

I. 統一環境

1. 世界情勢

가. 國際政治

(1) 世界秩序의 多極化

蘇聯의 붕괴로 美國이 유일한 軍事強國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의 국제경제 주도권 약화, 유럽통합 및 日本의 經濟力 상승 등으로 冷戰以後時代 國際秩序는 多極化趨勢를 보이고 있다.

美國의 國際的 役割은 재정 및 무역적자 확대, 생산성 저하, 실업을 증가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은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분쟁에 대한 일방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地域紛爭에는 자국 주도아래 '集團介入主義'를 바탕으로 한 선별적 개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12월 舊蘇聯을 법적으로 계승한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 확립, 대외적으로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과거와 같은 軍事的 霸權追求보다는 經濟發展을 위한 對外協力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개혁파와 보수세력간의 권력투쟁, 독립국가연합의 균열, 가격자유화정책의 부작용, 民營化政策 수행상의 장애 및 서방진영으로부터의 지원 부진 등으로 인하여 政治不安과

經濟混亂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서유럽 12개 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91.12)에서 채택된 조약에 따라, 通貨統合 뿐만 아니라 政治統合까지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安保問題에 있어서 유럽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재래식무기감축(CFE)에 합의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서유럽동맹(WEU) 및 북대서양협력회의(NACC)를 통한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日本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을 모색하고 있는 바, 1992년 6월 15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안을 통과시키고 캄보디아에 自衛隊 兵力을 派遣(10.14)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에 있어서 군사 및 이데올로기보다 經濟力의 比重이 增大됨에 따라 세계질서는 보다 多極化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유럽통합과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地域 強大國의 登장이 예측되며, 이들은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당선자는 국내경제 재건을 우선시하는 정책기조하에서도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

하고 있는 바, 세계질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多極體制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地域葛藤 深化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냉전시대에 국가, 민족 및 종파간에 잠재되어 있던 대립과 갈등이 「대체이데올로기」 양상을 띠면서 宗教 및 民族紛爭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소련의 붕괴 및 동유럽의 민주화와 냉전의 종식에 따른 民族主義 復活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민족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민족분쟁은 독립국가연합(CIS)의 분열, 유고 내전 사태,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등 國家 分裂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구소련 및 동유럽 難民의 서유럽으로의 대량 이민 사태는 지역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 이주한 移民者數는 1990년 130만명, 1991년 1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집중되고 있는 난민(1991년 25만명, 1992년 50만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外國人 排斥과 反猶太主義를 표방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가치체계 붕괴에 따른 사회혼란과 고용기회의 상실 위협과 함께 統一獨逸의 政局을 不安定하게 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안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유럽통합은 화폐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덴

마크의 비준 반대를 시발로 표출되고 있는 구성국들의 國家利己主義로 인하여 轉換期를 맞고 있다.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내용중 국가고유권한의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로의 이양 및 單一通貨制度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럽산 農產物의 對美 輸入規制와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對美 무역협상에서 독일과 영국은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프랑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회원국들간 불협화음이 노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이기주의는 獨逸의 유럽안보에 대한 태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독일은 유럽공동체 공동외교정책 합의에 반하여 크로아티아를 승인하였으며, 北大西洋條約機構에 잔류하면서도 프랑스와 獨佛聯合軍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東北亞에서의 領土 및 分斷問題와 관련, 탈냉전의 과도기에 단시일내에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국가와 기존의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관련당사국간의 이해대립으로 緊張狀態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상은 미·러의 세력약화로 빚어질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日·中의 役割增大 노력과 더불어 역내국가들의 軍備增強趨勢를 가속화함으로써 잠재적 지역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中東 平和協商에서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강경 아랍국의 유화적 태도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회교원리주의」의 부상과 중동지역의 패권을 겨냥한 이란의 강경주의 때문에 남부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간 무력충돌과 「가자지구」내 강경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무력저항은 중동평화협상 진척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또한 印度에서 일어난 힌두교와 이슬람교간의 宗教紛爭은 인도와 주변 회교국가들간의 정치·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극체제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地域勢力均衡의 變化와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족·종파간 갈등과 대립 및 民族主義 발흥으로 빚어지고 있는 국가분열과 국가간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경제난 해결 등 國內問題 優先政策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문제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 지역분쟁의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非傳統的 不安要因인 개도국의 인구폭발, 외채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및 가치체계 붕괴가 야기할 수 있는 極右와 極左의 테러행위 발생 가능성도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에 중대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다.

(3) 유엔의 機能 強化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국지적 불안정이 점증하는 가운데 美國은 유엔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을 통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유럽의 기존 지역기구들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대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범세계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化學武器 및 核擴散 防止 등 軍縮問題와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방지 등 環境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의 신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자국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汎世界的 價値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의 역할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국제사회는 지역분쟁의 해결모색과 분쟁의 사전방지라는 차원에서 國際的 合意導出 노력을 경주할 것인 바, 유엔의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유엔은 과거 안보위주의 기구에서 정치, 경제, 환경오염 등 다양한 국제문제를 다루는 國際協力機構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유고사태, 캄보디아 사태, 소말리아 난민구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의 기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地域的 多者間 協力機構들도 안보 또는 경제 위주의 협력기능을 확대하여 정치·경제·환경오염 등 국제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國際協力の 場으로 발전될 것이다.

나. 軍事·安保

(1) 世界的 軍縮 努力 持續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6.16~17)을 통해 1991년 7월에 타결된 전략핵무기감축협상(START) 수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전략핵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핵탄두 수를 2003년까지 미국 3,500개, 러시아 3,000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러간 전략핵무기 감축 합의는 獨立國家聯合에 속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전략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핵독점권을 완전히 인정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독립국가연합의 핵무기 보유 공화국들은 러시아의 핵독점권 인정과 자국에 대한 서방측의 경제지원을 연계시키고 있는 바, 미·러간 핵무기 감축의 성패 여부는 독립국가연합 구성공화국에 대한 미국 및 서방측의 經濟援助와 同 共和國들의 國內政治 安定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경제지원과 유럽안보협력회의 및 북대서양협력회의를 통한 간접적 안보공약을 제공함으로써 핵무기 보유 구성국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국가연합의 核 및 生化學武器 그리고 彈導미사일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은 1992년 3월 모스크바에 국제적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在來式武器 減縮과 관련, 舊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국가와 舊蘇聯 共和國 및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國家 등 유럽의 29개 국가들이 참여한 유럽재래식전력감축협정이 1992년 7월 발효됨으로써 유럽의 재래식무기 감축에 큰 진전이 있었다.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확산 방지 및 재래식무기 감축 노력은 1992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중

동 및 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 추세는 世界的 軍縮의 성공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世界的 軍縮 努力, 특히 핵을 포함한 大量殺傷武器의 減縮 努力은 미·러 등 관계 당사국과 유엔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다. 최근 지역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 추세와 관련, 중동평화협상의 적극 추진 및 군축을 포함한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多者間 地域安保協議體 구성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군축노력의 성패는 러시아와 서방제국의 무기판매와 연계되어 있는 바, 세계경제 및 무기수출국들의 경제사정이 군축성패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多者的 接近 趨勢 深化

동유럽국가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서유럽국가들의 안보결속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북대서양협력회의(NACC)를 별도로 설립('91.11)하여 구소련 공화국 및 中·東部 유럽국가들에 대한 안보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식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등 유럽의 모든 다자간 협력기구들이 유고사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同 機構

들의 仲裁努力은 실패하였다.

냉전이후시대 서유럽국가들은 유럽안보에 대한 비전 부재와 국내문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비생산적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地域紛爭에 대한 介入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에 신국제질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위한 다자적 접근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地域不安의 심각성에 대한 國際的 認識이 제고되면서 국제사회 및 관련 지역국들은 「地域紛爭의 局地化」를 위해 集團安보體制의 機能強化와 集團的 介入 등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적 접근은 현안문제 해결지연과 높은 유지비용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다자적 접근에 있어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다. 世界經濟

(1) 世界經濟秩序의 多極化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보질서와는 달리 미국, 유럽공동체 및 일본 등 3極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회복의 어려움, 유럽경제에서 통일독일의 지도력 약화 및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일본 경제의 침체 등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들의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1992년 世界經濟는 沈滯局面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2년에도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와 유럽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大西洋 중심 經濟交流가 鈍化된 반면 亞·太 國家間 經濟交流가 활발해짐으로써 세계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전반적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 동남아국가연합의 역동적 성장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中國의 경제 개혁·개방 성공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의 經濟的 力動性은 세계 무역뿐 아니라 경제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상대적 중요성 약화와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경제성장 저조 추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으로 인하여 世界經濟는 더욱 多極化될 전망이다.

(2) 國際貿易體制의 混調

국제무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汎世界的 機構, 유럽공동체 등 地域的 機構 및 국가간 雙務協商 등 세가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첫째, 汎世界的 自由貿易 유지와 관련,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1992년에도 타결되지 못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노출된 협상당사국들의 국가이기주의로 인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범세계적 무역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을 地域主義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1992년에도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과정에서 통화통합 日程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협화음을 노출하였으나 유럽공동체(EC)의 단일시장은 1993년에 예정대로 출범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타결(10.17)하였으며 동 협정은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 남아국가연합(ASEAN)은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하기로 합의(1.27)하고 1993년부터 공동특혜관세(CEPT)제도를 실행하여 역내국가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셋째, 兩者間 通商協商 중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일본간 협상이다. 미국은 미·일정상회담(1.8)에서 일본측의 성의있는 시장개방노력을 재촉하는 등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장개방 압력 및 무역역조 시정 요구를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1993년에 미국의 對日·中 시장개방요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무역 관리를 위한 범세계적, 지역적 및 쌍무적 체제하의 자유무역주의 퇴조는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질서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1993년에도 각국이 자국의 경제이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保護貿易主義化할 경향을 보이는 등 무역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 美·日關係

1992년 美·日 양국 정상은 「도쿄선언」(1.9)을 통하여 양국 관계가 世界的 同伴者關係임을 천명하였다. 미·일은 「도쿄선언」에서 안보 및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으로서 일본의 駐日美軍 駐屯經費 부담증대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기반으로 역내국가들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도쿄선언」의 핵심적 의의는 일본이 市場開放 擴大를 통해 미·일 貿易逆調 是正 노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보다 협조적 자세를 취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측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6.15)를 환영하였고, 일본은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10.14)하였다.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아시아 安保問題에 대한 日本의 發言權 增大를 제도화하고 정치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한편, 일본의 軍事大國化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할 목적으로 多者間 安保機構 구성을 제의하였다.¹⁾ 미야자와 총리는 또한 7월 1일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냉전이후의 미·일관계는 세계적 차원의 대등한 동반자관계이며 미·일은 아·태지역에서 兩頭體制의 구상에 입각하여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盟主役割을 수행하여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당선자는 국내경제 회복을 중시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同盟國의 역할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1993년 미국은 아·태지역 분쟁해결 노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증대를 요구할 것이며,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당분간 미국과의 安保協力體制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역내에서 역할증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經濟問題와 관련, 미·일 양국은 1990년 6월 타결된 구조조정협약(SII)결과를 事後 점검하기 위하여 年例 次官級協商을 東京에서 개최(7.28~30)하였다. 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하여 일본이 內需擴大策을 강화하고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며 일본내 합작투자를 촉진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미국기업의 체질개선을 일본측에 약속하였으나,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이 이번 회담에서도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構造調整協議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1) 1월 31일 유엔안보리정상회담시 및 6월 22일 일본국회 연설시.

1993년 미국은 미·일 구조조정협약에 대신하여 미·일정기 협의회 등 새로운 형태의 교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퍼 301조 부활 등 국내법 재정비를 통한 對外 市場開放壓力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클린턴 美 新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무차별적 보복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市場開放 壓力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산업분야에서의 시장개방 및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확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쌀시장개방과 관련,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되 개방 첫째 600~700%정도의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쌀수입을 제한하고, 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2) 美·中關係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中國內 人權問題는 미국의 對中 最惠國待遇 연장 등 양국간 경제협력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事案인 바, 미·중간 정치·경제적 갈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1992년 미·중간에는 中國內 人權問題, 貿易 不均衡問題 및 中國의 對外 武器輸出問題 등 현안을 둘러싸고 冷却關係가 지속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對대만 전투기 판매 결정과 러시아의 對中 무기 판매문제도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부시-李鵬간 회동시(1.31, 유엔안보리 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의 人權改善 要求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對中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美 議會의 결의(8.4)에 대해서도 內政干涉이라는 이유로 비난하였다. 인권문제와 관련, 중국은 罪囚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8.8)하고 일부 反體制 人士를 석방하는 등 선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1992년 미·중간에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중국의 武器輸出 問題도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약속(2.21)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정식 가입(3.9)하였으나,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對共產圈輸出統制委員會(COCOM)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7.24)하였고, 중국에 대한 슈퍼컴퓨터의 판매를 유보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의 무기판매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무기수출이 지역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대만 전투기 판매와 중국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입도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軍現代化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무기 구입을 적극 추진

한 반면, 미국은 대만에 60억달러 규모의 F-16전투기 150대 판매를 승인하고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9.2)함으로써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對대만 전투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對中 인공위성 수출을 허용(9.11)하였으나, 중국은 무기판매제한을 위한 유엔군축회의에의 불참을 통보(9.15)함으로써 양국간에는 갈등이 지속되었다.

미·중간 貿易摩擦도 양국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1년 중국은 127억달러 규모의 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 對美 무역흑자는 약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議會는 對中 조건부 최혜국대우(MFN) 연장안을 의결(8.4)하는 등 對中 通商壓力을 가하였으며, 美 行政府도 미·중무역협상과정에서²⁾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중국이 10월 10일까지 대폭적인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상품에 대해 高關稅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9.5)하고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는 등 對美 유화자세를 보였는 바, 이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부시 美 대통령은 對中 통상압력이 중국의 민간경제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여 중국내 개혁파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 의회의 對中 최혜

2) 1992년중 미·중무역협상은 8차에 걸쳐 진행되었는 바,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1.10~16, 2차: 2.24~26, 3차: 3.31~4.2, 4차: 5.21~22, 5차: 7.15~16, 6차: 8.19~20, 7차: 9.14~16, 8차: 10.9~10.

국대우 조건부 연장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9.27)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호응, 중국도 자국시장 개방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諒解覺書를 미국과 조인(10.9)함으로써 미국 상품의 對中 진출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향후 2~3년내 약 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컴퓨터칩 생산기술을 구입하기로 하였다(11.11). 중국의 對美 통상유화정책의 배경에는 GATT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확보, 對美 수출시장 유지 및 미국의 對中 경제보복 완화 유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民主黨 政府가 등장하기 때문에 중국내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美 신행정부가 중국 등 공산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의 방송」을 설립하여 이들의 민주화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同 계획이 미·중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美國은 대내 경제회복을 우선시하여 地域紛爭에의 介入을 最少化하고자 하고 있는 바, 미국은 지역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국가들에 대한 中國의 武器輸出을 적극 沮止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이 무기수출을 증대할 경우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태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중국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최혜국대우를 철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중국도 인권, 무기수출 및 무역문제 등에 대해 選別的으로 妥協姿勢를 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심각할 정도까지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美·러關係

1992년 미·러 양국은 核 및 在來式 武器減縮과 미국의 대 러시아 經濟支援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으나, 러시아의 對中 武器 및 尖端武器 製造技術 販賣는 양국간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軍縮協商問題와 관련, 미·러 양국은 「캠프데이비드선언」(2. 2)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고, 워싱턴 미·러 정상회담(6.16~17)에서도 1991년 7월 체결된 미·러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보다 더 큰 폭의 군축에 합의하였는 바, 미국과 러시아는 2003년까지 戰略核彈頭 보유수를 각각 3,500개와 3,000개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미국은 1992년 6월까지 유럽 배치 전술핵무기와 한국 배치 전술핵무기를 전면철수하고, 의회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비준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지상발사 SS-18 미사일의 전면폐기와 태평양지역에서의 해상발사핵무기의 전면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7월 17일 발효된 유럽배치재래식전력(CFE)감축협정에 따라 武器視察團이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1993년 1월

에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 상원은 1996년까지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8.3)시키고 러시아는 1993년 7월 1일까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시사(11.19)하였다.

미·러 양국의 대폭적인 핵무기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核先制攻撃原則을 固守하고 이를 정치적 목표달성과 협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전략을 채택(10.21), 러시아보다 우월한 전략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도 SS-20 폐기로 인한 對美牽制力 상실을 우려하여 미사일기동체제를 보유한 SS-25를 보강하고 있다.

서방 선진7개국(G7)은 240억달러 규모의 對러 차관제공에 합의(4.25)하였으나, 미국은 자국의 경제사정 악화와 러시아의 경제혼란 등을 이유로 對러 援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루블화의 兌換性を 공표(7.1)한 이후, 미국은 하원에서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원조계획법안을 통과시키고, 11억5천만달러(차관보증 9억달러, 식량원조 2억5천만달러)에 상당하는 對러 식량원조계획을 발표(9.14)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원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對美 협력관계를 최우선적인 외교정책 목표라고 밝힌(11.2) 바 있고, 엘친도 訪韓時(11.18~20) 향후 2~3년간 잠수함 건조를 동결하고 클린턴 미 신행정부와 전략무기 추가 감축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對러 경제지원 확대 가능성과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향후 미·러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92년 엘친을 위시한 개혁파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서방의 對러 경제지원 부족에 따른 경제난이 었는 바, 1993년 러시아가 대내 안정을 회복하고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對러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對러 경제원조 조건으로 제시한 루블화의 안정, 월 9% 이하의 인플레이션 유지 및 적정수준의 재정적자 유지 등이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미국의 對러시아 경제지원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日·中關係

國交 正常化 20주년을 맞은 일·중 양국은 1992년 政治 및 經濟的 側面에서는 協力關係를 강화하였으나, 軍事的 側面에서는 상호 牽制立場을 보였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일본의 기술과 자본 도입 확대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협력법안 통과(6.15) 및 플루토늄 반입 등 일본의 국제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기도와 釣魚臺列島 및 南沙群島에 대한 중국의 領有權 主張은 일·중 협력관계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미국 등 서방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 및 정치개혁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對美關係 개선을 측면 지원하였다. 특히 와타나베 外相의 방중시(1.3~6) 일본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해 협조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역내에서 자국의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목인을 유도하였다. 중국은 對美關係에서 소련붕괴 이후 약화된 전략적 지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對日協力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釣魚臺列島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영해법을 제정(2.25)하고 일본이 自衛隊의 해외 파병을 추진함으로써 일·중관계는 일시적으로 긴장국면을 맞았다. 특히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위한 행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방일시(4.4~10)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이 일본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키히토 日本 國王의 訪中(10.23~27)에 앞서 양국은 사전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중국의 이해, 일본의 對中 借款 제공문제, 釣魚臺列島에 대한 영유권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였다. 일본 국왕의 방중을 통해서 일본은 역내 강대국인 중국과의 과거사를 매듭지음으로써 국제정치무대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국왕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도 개혁과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대내정치 안정을 기하고 天安門事件 이후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외교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 국왕의 방중을 계기로 경제대국인 일본과 핵무장국인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적 대립을 피하고 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일·중간 정치적으로는 우호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나, 軍事的으로는 競爭關係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에 이르는 군사비(1991년 165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도입함으로써 軍事大國化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도 1992년 국방비를 1991년 대비 12% 증액하였고,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를 구입하고 항공모함 구입을 추진하는 등 해·공군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일·중간 군비경쟁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1993년에도 양국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일·중간에 긴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일·중간 경제협력관계는 江澤民 總書記의 訪日 및 아키히토 일본국왕의 訪中 등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었다. 일본은 江澤民의 방일시 1995년까지 8,100억엔 상당의 借款을 중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의 GATT 가입을 위해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373억엔(11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차관을 중국에 제공(7.19)하였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일본의 對中 投資 증대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3년에도 일·중관계는 協力과 牽制의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역할증대를 위해 역내 강대국인 중국의 양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3년 일·중은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관계가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악화될 경우 일·중간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중이 모두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군사력을 증강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국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日·러關係

일본과 러시아는 過去遺産인 領土問題 및 敵對的 關係를 청산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직도 동북아시아 및 일본의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나,³⁾ 영토문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

3) 일본 방위청은 “구소련이 극동지역에서 一貫하여 量과 質 兩面에 걸쳐 軍事力을 增強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軍事作戰 能力도 향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日本 防衛廳, 「防衛白書」(1992), pp. 50~51 참조.

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友好關係를 潛在的 同盟國關係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2년 일·러관계는 「日·蘇 共同宣言」(’56.10)의 합법성을 승인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91.12.28)함으로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일·소 공동선언」에 의하면 양국간에 平和條約이 체결될 경우 러시아가 北方領土 2개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일·러 정상회담(1.31)에서 북방영토의 對日 返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 일·러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2.10~11) 등 다각적인 접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방영토의 대일 반환과 관련된 이견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본은 「2段階 公式」(평화조약 체결과 연계한 2단계 반환)을 제시한 반면, 러시아는 「5段階 解決方案」(북방영토문제 인정, 북방영토의 비군사화,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인 전환, 평화조약 체결,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북방영토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5단계 해결책에서 후퇴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의 島嶼를 우선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10.7)하였다. 이러한 엘친의 先 2개섬 반환, 後 협상 주장에 대해 일본이 4개섬 一括 返還 또는 2개섬 반환후 나머지 2개섬 반환을 보장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북방영토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 등 經濟難 解消 및 亞·太地域으로의 積極進出을 위하여 대일관계 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9월로 예정되었던 러시아대통령의 방일은 북방 4개도서 문제에 대한 일·러간 이견으로 취소되었다. 옐친의 방일은 일본의 對러 경제원조와 북방4개도서 중 2개도서(하보마이, 시코탄)의 대일반환 연계에 대한 러시아 군부와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 7월 27일 실시된 이즈베스치야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모스크바 시민의 65%가 북방도서의 반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군부는 캄차카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레이더시스템 운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출구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북방영토의 반환을 반대하였다.

한편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우려해 온 일본은 러시아 극동군의 해·공군 현대화에 대처하여 홋카이도(北海道)에 첨단군사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영토문제에 대하여 러시아가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막강한 극동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은 러시아를 潛在的 假想敵으로 인식하여 對러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일·러 經濟關係와 관련, 일본재계는 「소련동구무역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의 對러 경제지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진단을 거친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4.29)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불투명한 장래를 고려, 식

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원조 이외의 對러 경제협력에는 소극적이거나, 서방선진7개국회담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한 對러 경제지원에는 참여하고 있다.

1993년에도 北方領土問題와 經協問題가 일·러관계에 最大懸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옐친의 政治的 位相이 약화되는 반면 保守派의 발언권이 신장되고 있는 점과 북방 영토에 대한 日本의 強硬 立場을 감안할 때, 북방영토문제가 1993년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일본의 對러 경제지원도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3년 상반기 예상되는 옐친의 방일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이견으로 일·러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 中·러關係

1992년 중·러 양국은 國境協定('91.5 체결) 비준서를 교환한 후, 군사 및 경제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國境問題와 관련, 중·러 양국은 코지레프 러시아외상의 방중시(3.16~17) 東部國境線 劃定 협정 비준서를 교환(3.16)하였고, 쿠나제 러시아외무차관 방중시(10.26)에는 1989~1991년간 구소련과 중국간 협의된 국경문제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西部國境線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과거 중·소 분쟁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동부국경

선 문제가 일단락됨으로써 1992년 중·러는 군사 및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소련붕괴 이후 중국은 동남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약화에 따른 일본 해군력의 상대적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은 러시아와 핵무기 적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폭격기 구입 계약을 체결(10.8)하였다. 또한 안드레이 코케이신 러시아 제1국방차관의 訪中(10.14) 및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11.24~26)을 계기로 중·러간 군사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간 군사협력관계는 러시아에게 외화획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일관계의 냉각에 따른 외교 및 경제적 손실을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다. 중국도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해·공군력 현대화를 도모하고 미·일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대내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고 있는 중·러 양국은 1992년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였다. 중국 黑龍江省과 러시아 아무르 자치주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3.5)하여, 담배, 섬유, 시멘트 등 분야에서의 합작투자에 합의하는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중·러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도 合作經濟特區가 모스크바 근교에 건설(12.1)되는 등 경제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1992년 9월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24억달러로 증가하였고, 그 중 邊境貿易額은 약 20억달러에 달하였다.

1992년 옐친 러 대통령의 중국방문시(12.17~19) 체결된 국경병력 감축협정, 중국내 핵발전소 건설협정 및 통상협정 등을 바탕으로 1993년 중·러 양국은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1993년 상반기 예상되는 江澤民의 러시아 방문을 전후하여 러시아로부터 SU-29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인권문제 및 對中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미국 신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가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정도까지 중국과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러는 1993년에도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인 바, 양국간 邊境貿易 등 경제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나. 東北亞 安保環境

1992년 東北亞 4強間關係를 볼 때 協力이 강화되는 한편 새로운 葛藤要因이 擡頭함으로써, 동북아정세는 過渡期的 不安定性을 보여 왔다.

미·러 양국은 대폭적인 핵감축에 합의하는 등 安保的 同伴者關係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동북아지역 군축 등 역내질서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아키히토 일본 국왕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過去事問題를 일단락 짓는 등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역내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쌍방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된 점은 역내 질서의 안정유지에 긍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또한 한·중 국교 정상화와 한·러 기본관계조약 체결도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東北亞秩序의 脫冷戰化를 촉진하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간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화해와 긴장완화 추세는 역내 군축과 역내 국가간 경협증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영향력 쇠퇴, 미국의 아·태전략 재조정,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수용과 해·공군력 증강 등은 동북아 4強間 勢力均衡 재편과정에서 과도기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동북아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내 경제문제 해소를 위한 해외주둔 미군 유지비 삭감 필요하에 대외정책 기조를 「封鎖政策」에서 「集團介入政策」으로 전환(2.5, 베이커 국무장관)하고 필리핀내 미군을 완전 철수하였다. 한편 일본의 캄보디아 평화유지군 파병(10.14)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야기하여 동북아질서에 잠재적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중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으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軍事力 競爭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비(1991년 165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을 반입하였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MIG-27 戰鬥機 24대를 도입하는 한편 MIG-29 戰鬥機, 尖端武器 技術 및 우라늄 濃縮技術 導入, 航空母艦 購入 등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3년동안 國防費를 연 12% 이상 증액하여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동남아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15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9.2)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군사력 경쟁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다. 1993년에는 미국 신행정부가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군의 海外 駐屯費用 削減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의 제한적 군사력 증대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일·중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중, 일·러 및 중·동남아간 領土紛爭도 동북아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領海法을 제정(2.25)하여 釣魚臺列島와 南沙群島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등 남지나해와 동해에서 영향력 신장을 기도하고 있다. 아울러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일본간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도 역내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러시아의 국내정세와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1993년에도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北韓의 核開發問題는 1992년에도 지역 긴장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은 5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을 수용해 왔으나, 미국과 일본은 남북 상호핵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한 對北關係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역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南北韓 當事者間 協商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日本과 南韓의 核武裝 등 주변정세 안정을 저해하여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와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핵문제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1993년에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동북아 질서 안정 및 남북한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력균형 변화와 일부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를 우려하여 관련국들은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냉전

이후시대 미국은 국내 경제난으로 일본과 한국에 美軍 駐屯 分擔金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도 구소련의 「新思考 外交路線」에 입각하여 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기구 설립을 적극 주창하여 왔으며, 엘친대통령도 방한시(11.20) 지역국가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주변환경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중국도 지역불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1993년에는 역내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중, 일·중, 일·러 등 강대국간 및 남북한간 상호 불신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93년 역내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형태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經濟問題와 관련, 域內 國家間 交易 增大 등 經濟協力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구조조정협약(1.9, 7.30) 및 쌀시장 개방 의사 표명(12.1, 미야자와 총리) 등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장개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미국과의 貿易摩擦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의 對韓 技術移轉

問題를 협의(11.8)하여 경제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역내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도 두 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10.5)하는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개발문제와 투자위험도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경제협력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1993년에는 미국에서 「軍事安保」보다 「經濟安保」를 중시할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할 것인 바, 역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미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을 중시하고 있는 韓, 中, 日 등이 미국과의 협상과 선별적인 양보를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심각한 무역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러시아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당분간 北方 4島를 일본에 반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1993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지원이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 부여와 人權問題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관계의 긴밀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기대하는 대일경협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북미지역 등의 地域主義化 趨勢에 따라 최근 동북아에서도 「中華經濟圈」, 「環日本海 經濟圈」 및 「黃海經濟圈」

등 地域經濟協力體 形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동북아 지역국들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일본주도의 지역경제 블록화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동북아에서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같은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역내 국가간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는 지역경제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韓半島 統一環境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한·중 수교와 한·러 기본관계 조약 체결 및 북한 핵개발에 대한 주변 4강의 압력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러간 핵감축 합의와 안보적 동반자관계 구축은 한반도의 군축 및 남북간 정치·군사분야의 긴장완화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경험증대 추세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남북간 경제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4강은 한반도 통일로 인한 不確實한 未來 보다는 分斷의 안정적 관리라는 現狀維持를 選好하고 있다. 역내 다자간 신뢰구축 제안 대두도 韓半島問題의 國際化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은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자세는 동북아의 긴장완화 및 남북간 화해·협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진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따른 지역 긴장은 남북간의 군비통제노력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동북아에서 周邊 4強間 和解와 緊張緩化 추세가 심화되는 한편, 4強間 競爭과 對立 등 既存 葛藤要因이 잔존하는 가운데 軍備競爭 및 領土紛爭 등 새로운 긴장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적 잔재와 탈냉전적 추세가 병존하는 동북아질서의 이중구조는 199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封鎖政策(Containment Policy)에서 集團介入政策(Collective 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전진배치전략을 견지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역할을 조정하면서 迅速對應能力을 강화하고 있다. 駐韓美軍도 1990년 2월의 미 국방부 아태전략구상(EASI)에서 제시된 제1단계 감축 일정에 따라 1992년말까지 7천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에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을 기존의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주한미군 구조개편 차원에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를 해체하는 대신 한·미연합해병사령부(CMFC)를 창설(12.1)하고 한미연합사(CFC)의 지상구성군(GCC)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였다. 防衛費 分擔과 관련,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중 미 현역 및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즉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1/3을 한국측이 단계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1992년에 1억8천만달러를 부담하였으며 1993년에는 2억2천만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對韓防衛公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지역 안정에 최우선적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1992년 10월 7~8일간 개최된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제2단계 감축계획('93~'95) 유보를 재확인하고 平時作戰統制權을 1994년 이전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同 協議會에서 양국은 북한이 상호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93한·미연합군사훈련(Team Spirit)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간 經濟·通商關係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무역불균형이 1991년부터 해소되고, 한국이 점진적으로 시장개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뚜렷한 마찰의 가능성을 노정시키지 않은채 양국은 金融市場, 知的所有權, 通信, 農產物 등

分野別 市場開放 協商을 계속하고 있다.

1990년대 양국간의 교역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시(1.5~7) 미국은 시장개방 幅의 확대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高位 정책당국자들간 회합에서는 한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및 시장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무역실무회담('92.10) 및 분야별 회담('92.2, 한·미 통신험상; '92.3,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92.9, 한·미 쇠고기협상 등)에서는 한국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방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兩面的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클린턴 미 신행정부의 對韓半島政策은 기존의 대동북아정책에 변화가 없는한 크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의 幅과 速度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한미군 유지경비의 한국측 분담액 증액과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을 촉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 신행정부는 核 및 미사일기술확산문제에 대하여 공화당 행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의 核 및 生化學武器 開發·備蓄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經濟·通商分野에서도 미국은 국내경제 활성화와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한국의 不公正 貿易慣行 改善, 市場開放措置 및 開放日程短縮 등을 계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국이 競爭力을 가지고 있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과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분야에서 양국간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나. 韓·日關係

1992년 한·일 양국은 2차례의 頂上會談(서울, 1.16~18, 교토, 11.8)을 통하여 懸案問題 해결과 동북아 질서 변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한·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자위대 해외파병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문제, 북·일 수교문제,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기술이전 문제, 정신대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同 頂上會談에서 한국은 일본의 自衛隊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및 일·북한간 국교수립전 핵사찰선행원칙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1991년 「國防白書」에서 일본의 신증기 방위력 정비 계획('91~'95)이 일본의 군사전략을 지역방위에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의 방위로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헌법상 專守防衛에 입각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安保問題에 관한 견해 차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일 양국은 軍人士交流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國防白書」를 통해 「한·일간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추진」방침을 밝혔으며, 일본도 防衛廳 長官의 발언을 통하여 한·일간 군인사교류를 확인(10.19)하였다.

한·일 교토 정상회담(11.8)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일간 유기적 협력관계 및 지역안정을 위한 미군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 및 日王의 방중이 지역안정에 유익하였음을 확인하고 러시아 개혁과정에 있어서 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정상회담은 한·소, 한·중 수교 및 북·일 수교교섭 등 양국의 대외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간 인식의 차를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1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국은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립 등 경제협력 및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7.1)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技術保護主義 및 市場의 閉鎖性 등으로 인하여 대일무역역조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貿易不均衡과 技術協力 문제의 해결없이는 양국간 선린우호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993년 한·일 양국은 安保面에서 상호이해를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군인사교류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經濟面에서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해 기술이전 및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북·일 수교협상문제는 한·일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나 일본이 한국의 남북상호핵사찰 우선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큰 마찰 없이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3년중에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가 해결될 경우 修交

時期, 戰爭賠償金 問題 등 경제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북·일 교류의 규모와 속도를 놓고 한·일간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韓·러關係

한국정부가 러시아를 蘇聯의 法的 繼承國으로 승인('91.12.27)한 이후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는 확대되고 있다.

한·러 양국은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한(3.17~19)과 이상욱 외무장관의 방러(6.27~30)를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핵문제 등 국제문제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구축하였다. 또한 軍事分野에서도 한국의 합참제1차장이 한국군 장성으로는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7.27~29)하였고, 러시아의 국방부 제1차관이 방한(10.4~8)하는 등 양국 군고위인사들간의 교류가 있었다. 양국간 領事協約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에 한국총영사관이 개설(10.26)되었으며, 부산에 러시아의 총영사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대리 경협차관 재개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한국과의 제반 관계 발전을 통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집권 이후 최초의 아시아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정상회담(11.19)은 양국간 友好關係를 深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이중과세 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경제공동위원회 구성규정」, 「문화협

정],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 합의서」 등 6개의 조약 및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1961년 소련과 북한간에 체결되고 1991년에 5년 더 연장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의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이 방한시 전달한 KAL기 블랙박스에서 비행기록장치 테이프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옐친정부의 신뢰도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한국과의 양자간 해결 모색보다는 미·일이 참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한국은 이에 동의하였다(12.8).

經濟面에서, 한·러 양국은 「산업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9.1)하고 러시아측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 우주, 통신, 전자, 합금소재 등 군수산업의 民需轉換事業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교환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借款問題와 관련, 러시아정부는 옐친 대통령 방한 직전에 구소련 채무승계와 소비재 및 은행차관 상환을 약속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방한 중 北方島嶼의 자원탐사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각종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에 공식 제의하였으며, 양국은 세계 최대 가스전 중의 하나인 야쿠트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하여 50대 50의 투자비율로 한·러기업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11.20)하였다.

러시아의 체제개혁과 관련, 제7차 인민대표대회(12.1~14)

에서 급진개혁정책의 입안자인 가이다르 총리서리의 인준이 거부되는 등 보수·개혁파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도 보수파인 체르노미르딘 부총리가 총리로 취임하였으며, 엘친 대통령과 최고회의가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1993년 4월 11일 실시하기로 합의(12.12)함으로써 러시아의 장래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 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파간 대립은 러시아의 정국 불안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국내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바,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南北韓間 平和共存體制를 維持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외교기본구상」 최종안(12.2)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도발 등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이 韓國에 偏向된 等距離外交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케 하고 있다. 한·러 양국은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 합의서」를 통하여 군고위장성 상호방문, 군사훈련 상호참관, 합정 및 비행단의 상호교환 등에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한·러간 군사교류의 확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할 것이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러간 군사협력 문제가 한국의 대미·일·북한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經濟分野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 작업과 나훗카 한국공단 설립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러시아는 한국에 목재, 석탄 등 천연자원의 수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러 消費財 轉貸借款 輸出이 1993년 1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한국의 대리차관에 대한 이자 지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는 러시아의 국내경제 상황에 의하여 좌우될 전망이다.

라. 韓·中關係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정치·경제 등 諸側面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중 국교정상화는 李相玉 외무장관의 아·태경제사회이사회 北京會議 참가시(4.8~17) 李鵬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회동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한·중 수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 楊尙昆 國家主席이 북한을 방문(4.13~17)하여 김일성에게 한·중 수교에 대해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군사협력관계 지속을 약속(6.4, 楊白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방북시)하는 등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의 對韓修交는 경제발전, 일본의 정치·군사 역할 증대 견제 및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對北韓 영향력이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중 수교후 성사된 盧泰愚 대통령의 중국방문시(9.27~30) 양국은 경제관계 확대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논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의 핵 보유 반대, 북한과의 핵협력 반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지속적 핵사찰 수용 권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등 4개 원칙을 천명하였다. 盧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상호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對美·日關係 개선을 지원할 것을 언급(9.29)함으로써, 중국에게 對北 說得을 위한 名分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의 효력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8.24, 외교부 대변인)하고,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10.9, 張庭延 대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 지속과 韓國戰 참전에 대한 입장불변은 한·중간 정치적 협력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기존 유대관계 지속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對北 硬貨決濟 시행 유보조치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당분간 韓半島의 통일 보다는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시킬 정도까지 한국과의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3년 1월 클린턴 신정부 출범시 미국과 중국이 人權 및

貿易問題로 갈등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대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對美·日 견제차원에서 한국과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2년 한·중 양국은 무역협정을 발효(2.1)시키고 투자보장협정을 체결(5.2)하였으며, 수교를 계기로 양국 경제관계가 공식화되었다. 盧대통령의 방중시, 양국은 무역 및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경제무역기술공동위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北京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담시(12.1~8) 양국은 상호 最惠國待遇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양국간 교역액은 약 100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이 한국의 3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992년에 조성된 이와 같은 교역 증대 등 경제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1993년 상반기 한·중 양국은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값싼 경공업 제품과 농산품의 대량 유입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韓半島問題와 관련, 1993년에도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희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적 제재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이며, 이는 한·중 정치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II. 北韓 情勢

1. 國內情勢

가. 理念과 權力承繼 問題

金日成은 1992년 「新年辭」를 통해 전체 주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과 혁명의 주체를 계속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金正日은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에 대한 談話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을 통해 北韓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黨의 총체적 노선을 제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現體制 固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同 談話에서 金正日은 사회주의 좌절의 근본 원인이 제국주의자들의 反社會主義 策動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官僚主義 등 내부적 요인에 있음을 지적하였는 바,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內部統制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사상·이념적 유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예년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북한은 「전국주체사상토론회」(4.1~3), 「군모범전투원대회」(9.4~5), 「함경북도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9.4), 「전국교육일군대회」(9.20~22), 「전국열사가족대

회」(10.1~2) 등 각종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외부사조 유입방지를 위한 主體思想 注入 努力을 배가하였다. 또한 김일성 80회 생일 행사에 참가한 세계 70개국 공산당, 노동당 대표들을 동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평양선언」을 발표(4.20)함으로써 사회주의가 건재하는 것처럼 선전하기도 하였다.

1992년에 들어 북한은 특히 인테리들의 思想·理念 武裝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인테리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정권수립이후 최초로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부문의 인테리들이 참가한 「조선지식인대회」(12.9~10)를 개최하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선전·선동매체들도 인테리계층에 대한 사상개조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이 인테리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테리들이 理念的으로 動搖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2년에도 사상·이념의 전파 또는 집행의 증추 기관으로서 당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담화(1.3), 인민정권창건 44주년 기념 연형묵 총리 보고(9.8), 당 창건 47주년 기념 김정일의 논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0.10), 개정헌법에 “당의 영도” 조항(제11조) 신설 등을 통하여 黨이 주민사상교양사업과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선봉에 설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당의 역할

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공산당의 관료화 및 교조적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북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北韓은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3차회의(4.8~10)에서 憲法을 改正하였다. 사상·이념과 관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퇴조를 반영하여 主體思想을 북한의 獨自的 活動指針으로 명시하였다(제3조). 개정헌법에서는 김정일체제의 이념적 구도를 체계화하였는 바, 80년대 들어 金正日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처하여 金正日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理念統合을 강조하였다(제80, 82조).

1992년에 있었던 金日成과 金正日의 談話, 論文 및 改正된 北韓憲法을 볼 때 北韓은 당분간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기존의 社會主義 基本路線을 固守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3년에도 각종 대규모 집회나 언론매체들의 선전활동을 통하여 체제고수를 위한 사상교육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로청 제7차 21기 대회(10.20~21)에서 제7차대회 이후 13년만에 제8차 대회 개최('93.2)를 공고하였는 바, 金正日 領導體制 확립을 위한 사상·이념 강화 활동이 1993년에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권력승계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중 金正日은 金日成과 함께 총 20여차례의 공식행사 및 연회에 참석하는 등 「후

계자」 역할을 계속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취임('90.5),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91.12) 등 군관련 지위를 강화하여 왔는 바,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의 군최고사령관 당연 겸직(제107조)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전반적 무력 통솔권(제113조) 및 중요 군사간부에 대한 인사권(제114조)을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金正日이 위원장인 金日成을 대신하여 군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수로 승진(4.20)한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664명의 장군을 승진시켰으며(4.23), 군모범전투원대회(9.4~5), 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10.14) 및 제2차 포병대회(10.28)를 주재하는 등 軍權을 행사하였다.

한편 「로동신문」은 7월 27일자 논설에서 金正日을 “당·국가·군대의 수위”라고 호칭하고 「중앙방송」은 8월 1일 金正日主義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함으로써 金正日이 당·정·군 등 권력전반을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北韓은 10월 11일 「중앙방송」 논설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동지는 조국통일의 향도자이다”를 통해 金正日이 黨과 국가의 사업전반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까지도 지도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12.11)에서 김정일의 친척인 함북도당 책임비서

姜成山을 신임 총리로 임명하고, 김정일의 핵심측근인 金容淳, 金達玄을 정치국 후보위원에, 金國泰, 金基南을 당 비서에 각각 임명하는 등 권력구조를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권력기반 강화조치에 따라 金正日이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내·외적 난관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사실상의 권력을 김정일이 모두 행사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金日成의 象徵性을 체제도전요인 극복의 原動力으로 삼아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金正日이 1993년중에 黨總秘書 또는 國家主席 등 상징성이 큰 직위를 승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북한이, 헌법개정과 당·정 인사교체 및 인테리를 비롯한 전주민의 사상무장을 강화함으로써 體制가 安定되어 간다고 판단할 경우, 제3차 7개년계획('87~'93)이 종료되는 해인 1993년 하반기에 7차 黨大會를 개최하여 金正日體制를 正式으로 出帆시킬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經濟事情과 開放問題

북한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1991년까지 5년간 平均成長率은 -0.04% 로서 이 계획기간중 연평균성장을 목표인 7.9%에 크게 밀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1991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38달러, 국민총생산

은 229억달러로 추정된다. 北韓經濟는 1990년 -3.7%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1년에도 -5.2%를 기록하여 2년 사이에 10%에 가까운 經濟後退를 나타냈으며 199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北韓의 實質經濟成長率 推移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연평균
3.3	3.0	2.4	-3.7	-5.2	-0.04

출처: 통일원, 「北韓經濟綜合評價」(서울: 통일원, 각년도).

한국은행, 「1991年 北韓 GNP 推定結果」(서울: 한국은행, 1992.8).

1991년 북한의 貿易規模는 27억 2천만달러로 1990년보다 41.4% 감소하였다. 구소련은 1990년까지 북한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바, 이와 같은 무역량의 減少는 러시아의 정치·경제 혼란에 따른 생산 급강하 및 수출여력 격감과 對北무역방식의 硬貨決濟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다. 러시아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1년 북한의 구소련과의 무역규모는 2억 3,100만루블로 1990년 14억 9,900만루블의 15.4%에 그쳤다.⁴⁾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중에 무역을 3.2

4) 무역진흥공사(KOTRA),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추정에 따르면 1991년 북한의 對구소련 무역량은 수출 1.9억달러, 수입 1.7억 달러로 무역규모는 3.6억 달러에 불과하다.

배로 증대한다는 목표하에 貿易擴大에 노력해 왔으나, 1989년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貿易逆調로 인하여 북한의 외채총액은 1991년 말 현재 92억 8천만 달러로서 수출규모(10.1억 달러)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外債負擔은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수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표 2> 北韓의 對外貿易

(단위: U.S.억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 출	14.9	16.7	20.3	19.5	20.2	10.1
수 입	21.1	24.0	32.1	28.5	26.2	17.1
무역총량	36.0	40.7	52.4	47.9	46.4	27.2

출처: 통일원, 「北韓經濟綜合評價」(서울: 통일원, 각년도).

한국은행, 「1991年 北韓 GNP 推定結果」(서울: 한국은행, 1992.8).

이와 관련, 북한 에너지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석탄의 1991년 생산량은 3,100만톤(1990년 대비 6.5% 감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總電力生産量도 263억Kwh(1990년 대비 5.2% 감소)에 머물렀다. 또한 原油導入도 1990년 252만톤에서 1991년 189만톤으로 25%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더욱 악화시켜 1992년 북한의 工場稼動率은 30~40%

에 불과하였다.⁵⁾

북한의 食糧難은 1991년 이후 계속되었다. 북한이 1991년에 필요로 하는 식량의 총량은 약 640만톤 정도인데 비해 1990년도 곡물생산량은 481.2만톤이었으므로 약 160만톤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2년의 식량수급은 總需要量이 650만톤인데 비해 1991년도 곡물생산량은 442.7만톤에 불과해 1992년에는 200만톤 가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⁶⁾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부분적 開放政策은 1992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북한은 정무원결정 제74호에 따라 나진, 선봉지역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등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91.12), 1992년 평양에서 개최된 東北亞經濟포럼(4.28~5.4)에서는 同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발표 등 外國資本 및 技術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37조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영과 합작을 장려하고 있는 바, 이는 對外經濟政策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개정헌법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요소로서 技術革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제26, 27조).

1992년 7월 15일 북한은 신화폐와 구화폐를 1:1의 비율로

5) 週刊「アエラ」, 1992. 7. 14.

6) 농촌진흥청, 「1991年 北韓의 穀物生産量」(서울: 농촌진흥청, 1992.11).

교환하는 貨幣改革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同 화폐개혁에서 일정 한도의 액수만을 교환해 주었는 바, 이는 화폐개혁을 통하여 遊休資金을 설비투자와 같은 생산부문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10.5)에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합영법」을 보완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은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등 북한에서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 稅金減免,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보장 등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기업법」에서 전액투자 외국인 기업의 활동을 自由經濟貿易地帶內로 제한한 것은 북한의 「統制된 開放」정책의 고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12.11)에서 姜成山을 총리로 기용하였으며 金達玄 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강성산은 1984년 당시 총리로서 外資導入을 위한 합영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1988년부터 함경북도 도당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을 추진하였던 바, 북한은 강성산의 총리 기용과 김달현의 국가계획위원장 기용을 계기로 1993년부터 적극적인 外資導入과 對外經濟協力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1994년부터 실시될 차기 경제계획에서는 대외경제협력의 비

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 및 경제협력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私有財産制度의 부분적 허용과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市場機能 導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적 조치만 가지고서는 외자도입 및 대외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 몰락 이후, 북한의 이들 국가와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도 외채문제로 인하여 膠着狀態에 놓여 있다. 따라서 1993년에도 원유, 원자재, 기술 및 자본재 부족은 지속될 것이며 전반적인 산업활동의 萎縮이 계속될 것이다.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북한은 일본과의 修交를 통한 배상금청구의 조속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 社會逸脫 現象과 統制問題

1992년 북한은 점진적인 開放에 대비하고 사회주의 沒落의 潮流가 체제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社會的 統制 메카니즘을 강화하였으나 食糧폭동을 비롯한 집단적 抵抗, 사회적 弛緩현상의 심화, 청소년범죄의 증가 등 社會逸脫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첫째, 衣食住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 의한 食糧이나 生活必需品 掠奪 事件들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심지어 군인들 까지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에 25kg들이 중국산 수입 밀가루 1천3백여 포대를 약탈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자동차 부품 竊盜, 외국인상대 소매치기 범죄 등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경제적 파탄에 따른 社會的 弛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幼兒遺棄 및 노령자 자살 등 생존능력이 부족한 노약자들의 도태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간 賭博성행, 무허가 여행 알선업자 등장, 金日成 뺏지 暗去來 등 社會紀綱 解弛를 나타내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시간때우기식 노동풍조로 이어져 북한 경제난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逸脫현상은 靑少年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북한 전체 범죄의 80%가 30세 이하의 청소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黨幹部 자제들의 외국문화 선호, 소외 靑少年들에 의한 浮浪兒組織 결성 등은 靑少年犯罪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수입이 많은 서비스업종 선호풍조가 만연하여 軍 입대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官僚의 부정거래 가담 및 주민들의 집단적 창고약탈 등 構造的이고 組織的인 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6월에는 함흥의 경찰시설들이 습격당했으며 두만강 인근 炭鑛에서는 폭동이 발생하였다. 7월 15일 貨幣改革 이후 지방도시의 주민들이 제한된 금액의 화폐교환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

켰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탈현상에 대응하여 북한은 해외동포의 방문과 서신왕래를 제한하여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思想教化 및 물리적 억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懷柔作業을 병행하는 등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은 思想統制를 강화하고 있는 바, 김일성 新年辭(1.1) 및 김정일 談話(1.3)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상반기에 356회의 집회를 개최하였는 바, 金日成 父子 偶像化 집회가 156회(김일성:54, 김정일:102)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50회생일(2.16), 김일성 80회 생일(4.15), 軍창건 60주년 기념일(4.25)에는 100여만명의 군중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政治犯의 강제수용 및 공개처형 등 물리적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는 政治犯 收容所가 12곳이 있으며 인구의 1%에 달하는 20여만명이 강제수용되어 있다. 정치적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은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용당할 뿐 아니라, 강제수용된 前職 軍·政幹部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이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개처형을 시행,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社會福祉政策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懷柔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2년 2월 13일 15년만에 賃金을 인상하였는 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는 평균 43.3%, 사회보장연금은 50.7%, 각급학교 장학금은 33%, 벼, 옥수수 등의 국가매입가격은 26.2%~44.8% 각각 인상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승계체제를 공고화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結束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은 지역과 집단 차원에서 차별적인 사회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상층지배집단에게는 高級情報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주민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나진·선봉 등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思想武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권력승계과정에 있어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검토 및 변혁의 핵심세력이 될 수 있는 인텔리 집단에 대한 교양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1992년 북한에서는 사회적 일탈행위가 빈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통제를 전년도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평북·양강도·자강도 등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주민들은 중국방송시청을 통하여 남한사정을 점차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外貨벌이를 위한 해외 동포초청사업이나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인식하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현 경제상태를 고려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시도하는 정보통제는 머지않아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일탈행위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食糧難이나 정치적 無力感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탈행위의 빈도는 1993년에도 증가할 것이며, 그 내용도 組織化, 廣域化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사회적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없으나 일탈현상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통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북한 개정헌법에서 법률에 의한 사회통제 강화를 명문화하고(18조), 刑事訴訟法 등을 정비한 것과 관련, 북한은 法務生活강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더욱 철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제의 억압과 주민들의 불만표출이라는 사회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리라고 전망된다.

라. 軍事政策과 軍事動向

1992년 북한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劣勢 및 경제침체와 권력승계문제 등 불리한 전략환경속에서도 軍裝備의 현대화를 포함한 4대군사노선을 보다 강도 높게 강조하였다. 북한의 軍事力은 남한에 대하여 量的으로 약 2배, 質的(戰力指數)으로 약 1.3배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은 군사력의 量的增強과 병

행하여 무기의 質的改進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상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T-62 戰車 성능을 개량한 「천마호」의 자체생산, AT-4(TOW형) 미사일의 장갑차 장착, 76.2밀리 견인 對전차포 대신 100밀리 自走砲로의 교체, 前方軍團 및 사단포병의 100% 自走化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AN-2기 개량생산, 혁신-2 헬기 생산 및 MIG-21/29 전투기 생산 추진, 그리고 잠수함 및 유도탄정 등 전투함정의 건조를 통하여 북한은 空中武器체계 뿐만 아니라 海上武器체계의 質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長射程 SCUD 미사일인 「노동1호」를 시험발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대남침투 및 돌파능력이 더욱 신장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방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바, 1991년 23.6억달러에서 1992년 27.5억달러로 3.9억달러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한은 15개의 차량화·기계화 사단·여단 및 10개의 포병여단을 증편하였으며, 평양방위군단을 창설하고 공군병력 22,000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⁷⁾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노력 또한 북한의 자체 군사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50년대 核武器 개발을 위한 基盤造成期를 거쳐 60~70년대의 적극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80년대에 들어서 핵

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Institute,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 140, 152~53.

무기개발을 실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核保有 문턱(nuclear threshold)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거리 핵탄두 수송수단의 개발과 함께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하여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줄 것이다.

1990년대 海·空軍훈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1992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이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남북대화와 관련한 대남평화공세의 측면도 있으나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經濟難, 특히 油類부족 때문이다. 북한은 機動訓練 부족에 의한 북한군의 정신적 弛緩을 방지하고 전력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악화된 대내외 전략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기존군사협력관계를 지속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舊소련과 1961년에 체결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침략시 즉각 지원” 조항(제1조 4항)을 固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1961년에 체결한 조약 제1조 4항에 상응하게 러시아가 이 나라(北韓) 안전을 담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8.11)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核에너지 개발계획 지원 재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공동투쟁”과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복잡하지만 朝·中 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등을 다짐하고 있다. 北·中 군사관계에서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중국인민해방군 친선 대표단의 평양방문(4.20),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楊白冰의 평양 방문(6.4) 및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의 평양방문(8.17) 등 형식적인 軍인사교류는 지속되었다.

북한은 中東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고 있다. 북한은 개량 SCUD 미사일 100여기를 이란·시리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무기수출은 총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무기수출로 군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경제에 필요한 外貨를 획득하고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主席職 다음의 권력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軍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軍部の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664名에 달하는 대규모 장군승진 조치(4.23)를 취하고, 장교들의 봉급을 평균 40% 인상하였다. 개정헌법에서는 또한 「국방」이라는 신설된 章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4대 군사노선을 명시(제58조~61조)함으로써 북한체제

의 유지를 위해 북한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軍事優位路線의 강화는 대외경제협력정책에 대한 군부의 반발을 완화하고, 김정일 승계체제 구축과 관련, 사회의 兵營化를 통해 북한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3년 북한은 경제 및 에너지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준의 군사훈련활동을 유지할 것이며,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내외 전략 환경의 극복과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군사우위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면적인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전면전과 같은 대남도발전략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對南赤化를 위한 공격적 군사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규모 동시다발 침투태세는 계속 견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테러활동이나 게릴라활동 등 비정규적인 침투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北韓의 主要 對外關係

가. 北·中 關係

1992년 北·中관계는 「血盟關係」에서 「友好關係」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었다. 양국은 상반기 楊尙昆 국가주석의 訪北과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訪中 등을 통해 혈맹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하반기에는 韓·中修交로 인한 긴장속에

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李鵬 수상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및 북한의 비핵화선언의 수용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환영(1.11)하는 한편 서방국가들의 對北援助를 촉구(1.27)함으로써 북한과의 변함 없는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楊尙昆이 평양을 방문(4.13~17)하여 북한과의 友好關係를 확인하였다. 북한도 노동신문대표단(3.6~13), 외교부대표단(3.10~19), 중앙통신사 대표단(5.12~24), 楊亨燮 최고인민회의의장단(5.19~30), 문화대표단(6.13~23) 등의 방중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졌다.

韓·中修交 및 盧泰愚 대통령의 訪中(9.27~30)에도 불구하고 北·中關係는 외형적으로는 냉각되지 않았다. 중국은 8월 초 錢其琛 外交部長의 극비 訪北時, 한·중수교와 관련된 중국측 입장을 사전 설명하고 북한측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北韓은 한·중수교에 대해 공식적 차원에서 반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지도부를 「변절자·배신자」로 간접 비난하는(9.27, 중앙방송) 등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交易相對國이 되었다. 北·中間의 무역은 1990년의 5억6백만 달러에서 1991년에는 6억 5천4백만 달러로 29.3% 증가하였다. 1992년 9월 현재 북한의 對中 輸出量은 1억1천만 달러로서 1991년 同期 對比 81.6%, 수입은 3억8천5백만 달러로서 1991년 同期 대비 2.9%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對北援助는 감소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兩國은 군고위급인사들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相互友好關係를 지속하였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친선대표단의 방북(4.20~29)을 비롯하여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楊白氷의 방북(6.4~10)을 통해 군사협력관계의 지속을 약속하였다. 김정일은 楊白氷을 외국고위층으로는 자신의 만찬에 처음으로 초대하는 誠意를 표시하였다. 또한 中國人民解放軍 친선참관단(8.24)과 中國人民解放軍總參謀部 대표단(10.6~12) 및 全中國人民支援軍 대표단(10.20~27)이 각각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답방형식으로 인민군친선참관단을 중국에 파견(11.24)하여 양국간 軍事協力關係를 유지하였다.

1993년에도 북한과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連帶의 바탕위에 社會主義體制 수호를 위한 공동보조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鄧小平과 金日成 등 혁명 1세대간의 정치적 연대를 공고히하는 동시에, 金正日 세대와 중국의 새로운 권력엘리트간의 긴밀한 紐帶關係를 모색할 것이다.

1992년 1월 26일 체결된 朝·中貿易協定에 따라 1993년부터 兩國 貿易이 우호가격과 구상무역방식으로부터 국제가격 및 硬貨決濟方式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식량난 및 에너지 부족과 외화 부족에 따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중 양국은 1993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군사 부문 援助가 거의 斷絶된 상태에서 북한은 중국의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반면, 중국도 군사면에서의 동맹조약이 유효함을 강조함으로써 한·중수교로 인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兩國은 社會主義 體制 固守를 위한 사회주의적 동맹관계를 토대로 하여 정치·군사적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은 향후 북한의 對日·美 早期修交를 성사시키기 위한 측면지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對南關係 改善을 계속 권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北·러關係

1992년은 北·러 양국에게 있어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調整期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의 출범(1.1) 이후 이데올로기 탈피 및 실리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한관계를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적 관계증진을 모색하기보다는 독립국가연합구성국들과의 관계에 치중하여 11개 전 구성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지크, 아르메니아 등 일부 공화국과는 경제협력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로가초프 러시아 大統領特使가 訪北(1.17)하여 姜錫柱 의 교부 제1부부장과 회담을 통해 核문제를 논의하고, 귀국후 타스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중 전쟁발발시 自動介入條項(제 1조)을 개정한 후

러시아가 同 條約을 승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1월 22일 러시아 外務部는 김정일의 最高司令官職 취임이 北韓憲法에 違背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제48차 UN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在러시아 北韓노동자들의 인권상태를 문제삼는 등 러시아 관료와 지식인들의 反北韓態度가 표출되었다. 그러나 한·러 정상회담 이후 열린 대통령은 기자회견(11.20)에서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대북한 관계도 축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균형적 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北韓은 1991년 7월 6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고르바초프에게 축전을 보내고 대대적 행사를 개최한 것과 달리, 1992년에는 이와 관련된 論評이나 공식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국제질서 및 러시아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 1992년 북한과 러시아는 각기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 격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國際價格을 적용한 硬貨決濟方式을 채택하고, 러시아의 경제혼란에 따른 생산감소로 인하여 북한의 對蘇수입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0년의 30억달러 수준으로부터 26억 2천만달러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구소련과의 교역액은 1990년의 11억4천만달러에서 1991년 3억6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1992년 北·러는 軍事的 側面에서 北韓의 核武器 開發 疑惑과 한·러(구소련)수교에 따라 군사적 동맹관계의 조정기를 맞았다. 독립국가연합의 軍총참모장 삼소노프를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3.2)하여 「1992~93 군사협력의정서」에 조인함으로써 군인사 교류 및 무기판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訪韓時(3.19) 러시아는 앞으로 대북 군사협력사항을 한국과 事前協議할 것이며 한국과 군사협력을 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盧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11.19)에서 對北韓 무기공급을 중단했음을 통보하고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제1조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北韓의 核무기개발 문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 북한 핵문제의 早期解決을 촉구하였다. 3월 21일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측 입장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李相玉 외무부 장관과 면담시(6.30) 러시아의 대북 核技術移轉 不許立場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8월 16일 엘친 대통령은 北韓에 南北韓간의 관계개선과 핵무기개발중지를 촉구하는 親書를 보냈다. 나아가 엘친 대통령은 盧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11.20)에서 北韓의 核개발 문제와 관련, 대북한 정치적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정책과 북한의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고려할 때, 1993년 북한과 러시아는 상대방의 국내정치와 외교노선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한편 人的 交流를 확대할 것으로 展望된다.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11월 20일 엘친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역은 평등의 기초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經濟沈滯 및 國際價格에 의한 硬貨決濟 方式과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양국간 교역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러 군사관계는 冷戰시대의 同盟관계로부터 탈피할 것이나, 북한의 武器體系 및 군대편제가 舊蘇聯의 영향하에 형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군사력의 對러시아 의존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北·日關係

1992년 北·日關係는 1991년의 5차례에 걸친 修交會談의 성과를 발전시키지 못한채 停滯·冷却狀態에 빠졌다. 양국간 수교회담의 부진은 상호인적교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經濟交流는 1992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1992년에는 세차례의 북·일 수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1.30) 이후 열린 제6차수교회담(북경, 1.30~2.1)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國交樹立問題와 관련하여 북한이 일본의 과거청산, 구조약의 성격문제와 함

게 중군위안부 문제를 새로 제기함으로써 난관이 조성되었다.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일본측이 財産請求權의 틀 속에서 해결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반면 북한측은 이를 불성실한 태도라고 일축하였다. 국제문제에서는 북한측의 국제핵사찰 수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核疑惑解消를 주장하자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화를 공격하였다. 제6차회담에서 양측은 수교시 발표할 공동문서에 대해서 협의하는 성과를 얻었을 뿐이다.

북·일 양국의 의견대립과 전인철 북한대표의 死亡(3.2) 등으로 지연된 제7차 수교회담(북경, 5.13~15)에서도 북한과 일본은 異見과 視角差를 좁히지 못하였다. 일본측은 南北相互核査察을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구조약의 무효성 및 중군위안부문제 등 過去清算問題, 「한·일기본조약」에 기초한 재산청구권방식의 不當性和 일본의 核武裝問題 등을 거론함으로써 양국간 論難이 지속되었다.

한편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법안의 통과(6.15)로 북한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핵무장화에 대한 非難을 強化하고 나섬으로써 수교교섭이 난관에 부딪혔다. 더욱이 한·중수교(8.24)와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10.12~18)에서의 社會主義的 市場經濟 採擇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일 수교교섭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만들었다. 반년만에 재개된 제8차수교회담(북경, 11.5)은 일정도 채우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일본측의 李恩惠문제 및 남북 상호핵사찰에 대한 再거론

과 북한측의 반발로 말미암아 대립한 것이다.

1992년에도 북·일간 인적교류는 계속되었으나, 수교교섭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북한과 일본은 1월 24일 북경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향후 1년 동안 양국간의 직행 전세계 비행기를 각각 80편(40왕복)씩 運航기로 合意하였다. 또한 금강산국제그룹의 朴敬允 대표는 4월부터 북한행 제일한 국인 관광객 유치 및 비자업무를 實行한다고 밝혔다. 4월 중순 김일성의 생일에는 타나베 사회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사회 양당의 대규모 사절단이 북한을 訪問하였으며, 사카이 미나토市の 시모니시 市長은 5월 중순 원산시와 友好都市 조인식을 가졌다.

한편 북한측에서는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비롯해 한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박관오 김일성대학 총장 등 50여명의 고위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북·일수교교섭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교착상태에 처한 북·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6월 중순 김용순 당 국제부장을 招請하고 이와 때를 맞추어 日朝友好親善協會(가칭)를 발족시키는 한편, 8월중 북한 거주 日本人 妻의 일시귀국을 실현한다는 3가지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하나도 성사되지 못했다. 1992년 下半期로 접어들면서 북·일관계의 정체·냉각기류를 反映하듯 相互人的 交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日朝友好親善參觀團이나 일본주체사상연구참관단이 북한

을 방문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

1992년 북·일간 經濟交流는 1991년에 이어 꾸준히 增大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統計에 따르면 중국(약 6억 5,400만 달러)에 이어 일본은 1991년에 북한의 제 2교역국(약 5억달러)으로 浮上하였다. 북한의 대일수출액은 약 2억 5,500만 달러로서 대중국수출(약 7,700만 달러)을 훨씬 上廻하였다. 1992년의 북·일무역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1991년에 이어 증가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전반기까지 일본측의 250여 기업이 북한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2년 들어 과거 朝總聯系 재일동포기업의 대북투자와는 달리 日本系 기업들이 直接投資·合營·共同開發 형태로 북한에 투자진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을 방문(7.14~21)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은 북한의 朝鮮國際貿易促進會, 朝鮮아시아貿易促進會와 日本의 東아시아貿易研究會, 日朝貿易會와의 共同報道 형식으로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무역 및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으로써 대북투자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일간 경제교류 증대는 북한의 무역확대 노력과 일본의 동북아경제권형성을 통한 실리추구 의도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993년에도 북한의 核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한, 북·일수교 교섭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4.9)시 대외경제조항을 마련한 뒤, 「외국인투

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10.5)하는 등 대외경제 개방 措置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1993년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이고 북한 정부수립 45주년(9.9)이며, 제7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다. 따라서 1993년 북한은 북·일수교교섭의 停滯·冷却을 打開할 뿐만 아니라 經濟難 解決을 위해서 한·미양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여하에 따라서는 핵문제의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일 양국간의 상호교류나 방문은 지속될 것이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핵문제와 별도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은 199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일수교교섭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보상방식 및 금액문제, 구조약 효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 北·美 關係

1992년 北韓은 과거에 비해 다각적으로 대미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 관계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1월 22일 아놀드 쉐터 美 국무부 정무차관과 金容淳 노동당 국제부장의 뉴욕회담은 北·美間 최초의 高位級 接觸이었다. 美國측은 韓國으로부터 핵무기 철수완료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고, 北韓의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반면 北

韓은 핵안전협정 서명계획을 밝히고 양국관계 개선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양국간 접촉수준이 격상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양국은 기존 입장차이를 상호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92년중 北·美間 參事官級 接觸이 제19차접촉(2.21)부터 제28차접촉(12.8)에 이르기까지 10차례에 걸쳐 北京에서 있었다. 또한 유엔에서 駐유엔 北韓 大使와 美國 政府官吏들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다.

美國은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진전, 테러리즘의 포기, 對美 中傷·煽動 중지, 미군유해 송환 등을 북·미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계속 제시하였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서방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일부 수용하였다. 北韓은 핵안전협정을 서명(1.30)·비준(4.8)하고, 제1차 사찰(5.25) 이후 1992년중 총 5차례에 걸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을 받았다. 또한 北韓은 미군유해 15기를 송환(5.13)하였으며,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집회도 중단하는 등 對美宥和 자세를 취했다. 이와같은 북한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南北韓 상호핵사찰 실시, 대중동 미사일 수출금지 및 인권개선 등을 兩國 關係改善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미간 공식적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2년 北·美間 경제교류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美 國際貿易委員會(ITC) 統計에 따르면, 美國의 1992년 1/4

분기 대북수출은 46만달러, 수입은 8천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북수출품목은 기계, 목재, 공구류 등이었고, 수입품목은 신발류 등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교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절대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人的 交流와 관련, 美國측에서는 빌리 그레이험 목사(4.2), 재미교포 조덕천 목사(5.23), 전직 미 하원의원 및 행정부 관리로 구성된 미국 자유연합대표단(5.28), 윌리엄 테일러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6.28), 스칼라피노 교수를 단장으로 한·미 한반도연구조사단(10.3~10) 등이 방북하여 김일성 및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하였다. 北韓측에서는 金炳弘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워싱턴, 5.30), 李三魯 북·일수교회담 북측 대표(하와이, 6.23) 등이 미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人的 交流를 통하여 兩國間 理解 增進을 모색하였으나 관계개선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1993년에도 北·美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 이탈리아 실업인들에게 「클린턴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클린턴의 당선직후 이례적으로 평양방송을 통해 즉각 사실을 보도하는 등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유화적 태도를 구사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은 10월 유세기간 중 「자유아시아방송」설립을 통해 북한등 아시아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시(11.12)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반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차기정부에 대한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인권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법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및 테러리즘의 포기가 선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금수조치는 풀리지 않을 것인 바, 북·미간 경제교류 및 협력은 1993년에도 증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北韓의 對南戰略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에 따라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南朝鮮革命力量 強化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2년에도 북한은 「기본합의서」(2.19)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발효(9.17)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협상과 통일선전술을 병행하는 二重的 對南戰略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基本合意書」 및 附屬合意書 채택·발효, 3개 분과위 및 5개 공동위의 구성·운영 등 남북화해·협력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고려연방제 실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선전해왔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각급 남북접촉과정을 통하여 和解分野에서는 “남한내의 연공통일역량 조성, 반공체제 와해 및 적들로부터 당과 수령의 보위”를, 不可侵分野에서

는 “군축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交流協力分野에서는 “남측의 개방유도 전략 경계와 함께 교류보다 합작우선, 대남 재야인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은 부속합의서 내용 협의시 「기본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철회하였던 대미평화협정 체결,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외국과의 방위조약 폐기 등을 재거론함으로써 회담의 공전을 유도하였다. 일단 미해결사항들을 附屬合意書의 附記事項으로 명시하는 선에서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기는 했지만, 향후 북한이 이 문제들을 재거론하여 南北對話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基本合意書」에서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對南 誹謗을 통하여 反政府鬭爭과 國論分裂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각종 방송매체(중앙방송,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를 통하여 대남비방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한민전, 조평통, 범민련, 범청학련 등)를 통하여 한국의 각종 운동세력(전대협·범민련·재야 등)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계속하는데 주력하였다. 예컨대 북한의 1일평균 대남비방 방송 횟수는 2월 13회, 3월 16회, 4월 23회, 韓·中修交(8.24) 이후 26회, 「김낙중사건」 발표(8.31) 이후 30회로 대남비방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발효(9.17) 직전에는 대남비방횟수가 1일 평균 25회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발효 직후 30회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10월 이후 대폭 증가하였

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최고당국자에 대해서도 「基本合意書」 발효 직후 일시적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4월 이후 다시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월 평균 20회 이상의 비난방송을 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14대 總選(3.24)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통하여 27개항의 「총선투쟁구호」를 제시하고 각종 유언비어 배포를 통해 反政府鬪爭 및 國論分裂을 선동하는 한편, 「선거투쟁」을 통해 주체노선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大選(12.18)에 대처, 대남선동방향을 야당 및 재야의 선거 이슈에 일치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9월부터 반민자당 연대투쟁 촉구 및 중립내각에 대한 비방선전을 통해 「민주연합정부」 수립을 선동하였다.

또한 북한은 4.19, 노동절(5.1), 광주항쟁 12주년(5.18), 7.4 공동성명 20주년(7.4), 당창건 47주년(10.10) 등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한국의 청년학생, 근로자, 종교인과 「민족대단결」을 결성하여 「반미자주화·반팻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인사 석방, 이인모 송환등을 거듭 주장하고, 한국정부를 反統一勢力으로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 대학가의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4월), 「인공기 계양사건」(5월)을 「의로운 통일운동」으로 고무·찬양하였다. 더욱이 「김낙중사건」과 「남한 조선로동당사건」을 통해 북한은 남북대화 기간중에도 한국의 정당인과 재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統一戰線事業을 추

진해 왔음을 드러내었다.

북한은 해외교포에 대한 統一戰線事業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북한은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한시해(조평통 부위원장)등이 참석한 「제1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동경, 4.1~2)와 「제3차 범민족대회」 및 「제2차 청년학생통일축전」(평양 및 관문점, 8.9~15) 등을 통해 기존의 대남주장을 되풀이하는 각종 문건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결성(8.15)함으로써 대남 統一戰線勢力的 組織化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표방하면서 「범민련」 및 「범청학련」의 결성과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쇠퇴에 따라 약화된 한국 및 해외의 親北勢力을 재집결하는 한편, 이러한 행사 및 조직결성이 불허될 경우 한국 정부를 반민족·반통일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분열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개정시 적화통일 조항(제5조)을 삭제했지만, 노동당 강령 전문에서는 여전히 전한반도의 공산화가 黨의 당면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상 1993년에도 북한은 평화공세와 통일전선사업을 병행추진하는 二重的 對南戰略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人權問題 및 南北韓 相互核査察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체제유지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二重戰略은 1993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체의 준비와 필요에 따라 1993년 하반기에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다면, 북한이 한국 신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간 변형된 형태의 「연방제」안을 제시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등 平和攻勢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동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범민련」 「범청학련」 등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선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3년 광복절을 계기로 해외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 및 1995년 통일완수투쟁결의를 재다짐하는 등 남북한 및 해외동포사회내의 聯共勢力의 규합을 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2년 발족한 「범청학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國論分裂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Ⅲ. 南北韓關係

1. 政治·軍事 分野

가. 和解·協力關係

1992년 남북한은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 및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야의 附屬合意書 등을 발효시키고,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共同委員會를 발족시킴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회담, 대표접촉 등 총93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보다는 외형적인 합의 도출의 성과만을 거두었으며, 제8차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이유로 공동위원회의 가동 및 9차 고위급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일시적인 梗塞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91.12.10~13) 이후 남북한은 대표접촉을 통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의 文案에 합의('91.12.31) 하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에 합의(2.7)하였다. 1992년 2월 18~21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기본합의서 발효에 즈음하여 한국측은 상호체제존중, 내정 불간섭 등 平和共存 原則에 입각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긴장완화 및 평화 보장, 다각적인 교류·협력 등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북한측은 “합의서를 이행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祖國統一 3大原則이 합의서 해석이나 실천방법 문제의 基本準據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주를 주한미군 철수로, 평화를 형식적인 군축으로, 민족대단결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불법방북자의 석방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였다.

남북관계에서의 현안과 관련, 한국측은 북한측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 수용,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조속한 발족, 同時 相互査察 및 특별사찰, 離散家族問題 해결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一括合意·同時實踐원칙을 다시 주장하고, “쌍방이 先次性을 부여하고 합의와 실천에 독립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件別合意·件別實踐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를 발효시키는 이외, 현안문제인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축소하지는 못했다.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南北政治分

科委員會 제1차 회의(3.9)를 필두로,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1차 회의(3.13) 및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1차 회의(3.18)를 개최하였다.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한은 7차례의 대표 접촉을 진행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3.14)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3.19)하였다. 이후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3회,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접촉 1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접촉 4회 등 총 17회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통일3원칙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부속합의서의 성격과 이행 방법, 공동위원회 구성의 우선순위, 공동위원회의 機能과 數, 접촉창구의 문제 등에서 남북한간 입장차이만 露呈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각 부문별 부속합의서와 相互核査察規程을 마련하지 못한 채, 1992년 5월 5~8일간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한은 부속합의서 작성에 앞서 「기본합의서」에 발족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南北連絡事務所 및 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2년 5월 18일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 등 3개 共同委員會를 구성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또한 「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이행기구로 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각 공동위원회의 실천지침으로 기능할 부문별 부속합의서중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는 9월 5일, 「화해 부속합의서」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15~18) 이전에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특히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團 및 藝術團」의 서울·평양 동시교환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합의서 실천의지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 이후 제8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정치분과위원회는 4차에 걸친 회의와 3차의 위원장 접촉, 4차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군사분과위원회는 5차의 회의와 1차의 위원장 접촉, 3차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4차의 회의와 1차의 위원장 접촉, 2차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은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單一文件으로 한다는데 우선 합의하고 내용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交流·協力分野에서만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和解 및 不可侵分野는 쌍방의 意見對立으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작성시한을 넘기고 부속합의서의 一括妥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8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측은 각 분과위원회의 협상과정에서 핵사찰문제, 이인모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한편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交換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은 南北赤十字 실무대표간에 제1

차 접촉(6.5)을 가진 이래 총 8차례의 대표접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차 접촉부터 핵문제, 이인모문제 등을 구실로 실무절차문제 토의를 미루어 오다가 제4차 접촉(7.8)부터는 이 문제들을 방문단교환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웠으며, 제6차 접촉(7.20)부터는 포커스렌즈 훈련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추가하였다. 결국 노부모방문단 교환실시는 북한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말미암아 霧散되고 말았으며,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를 남북협상과정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주었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부속합의서 내용상의 異見을 타결하여 서명·발효시키고 핵문제 및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포함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북한측도 동 회담에서 부속합의서 작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和解, 不可侵, 交流·協力 등 3개분야의 附屬合意書가 모두 채택·발효되었다. 동 회담에서 남북한은 이 밖에도 「南北和解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1992년 11월 5일부터 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필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 共同委員會를 각각 1주일 간격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틀 마련(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개 분과위

원회 발족)→실천·이행기구 구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 4개 공동위원회 발족)→부속합의서 채택→공동위원회 가동 및 구체적 사업 실천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핵문제 및 이인모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韓·美相互防衛條約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부속합의서에 附記事項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한국측의 화랑훈련, 92독수리훈련 등을 구실로 거부하였다.

한편 제24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10.7~8,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은 남북상호핵사찰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북한은 이를 비난하고, 동 훈련이 강행될 경우 대화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10.12 외교부 대변인 성명, 10.13 조평통 대변인 성명, 10.14 연형묵 총리 對南편지 등). 또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주재대사의 기자회견(11.2, 10.29 및 11.14)을 통하여 팀스피리트훈련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9차 고위급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제9차 고위급회담은 예정(12.21~24)대로 열리지 못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사이에 조성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는 冷却局面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구실로 남북간에 합의한 공동위원회 및 고위급회담 본회담 일정을 파기, 對話를 中斷하고 있는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核開發問題가 대일수교 및 대미관계 개선에서 핵심전제 조건이라고 판단, 南北對話의 進술적 效果를 再評價하려는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 不振 책임을 한국측에 轉嫁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共同委員會 稼動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가 北韓體制에 威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南北對話를 遲延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하여 대화를 지속하기보다는 주변정세 및 남한정세를 관망하면서 對南煽動을 강화함으로써⁸⁾ 한국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팀스피리트훈련이 종결(4.20)되는 시점까지는 小康狀態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확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정착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의

8) 북한의 한국 大選관련 煽動은 1992년 10월 중순이후 특히 강화되었다. 199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은 「평양방송」, 「중앙방송」 및 對南선전방송인 「한국민족 민주선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통하여 총 119건의 논설을 방송하였다. 북한은 이를 통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한편, 한국내에 소위 「민주연합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통일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혹 解消이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1992년 5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임시사찰을 이유로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相互核査察規程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비핵화공동선언의 명실상부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적 난관극복과 對西方 관계개선 등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문제에서의 기존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문제는 1993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1993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 6차 임시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연료봉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가 변한다면 對北經協이 실현되는 등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앞으로도 대내적 체제유지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對南關係에서는 宣傳차원의 평화공세와 顛覆차원의 통일전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2중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논의 자유화 주장 등 對南革命路線의 연장선상에서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에 응하면서 1993년 8월 15일을 계기로 제4차 汎民族大會를 개최하는 등 대남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남북한은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未解決狀態로 남겨둔 쟁점사항(附記事項)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각 공동위원회는 해당 분야별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政治·軍事問題 優先解決원칙과 一括合意·同時實踐원칙을 견지하고 부속합의서 채택시 미합의된 문제들의 우선해결을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급적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 부속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實利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이 당장 해결되기 곤란한 문제들을 迂廻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經協實現을 조건으로 相互誹謗·中傷 中止 등 部分的인 實踐措置가 이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1992년 북한은 헌법개정, 김정일의 원수취임, 총리교체 등 權力構造 개편을 통해 김정일의 지위를 강화하였는바, 이러한 김정일의 承繼基盤 강화작업은 199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김정일을 남북화해의 주도적인 인물로 부각시켜 권력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1993년 2월중 제14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최고지도자 교체와 북한에서의 김정일의 지위 강화로 인하여 1993년도 후반 이후 남북정상회담문제가 다시 남북간 협의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을 포함하는 남북 지

도자들간의 政治協商會議를 제의해 왔는 바,⁹⁾ 북한이 자진해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여 그 元首인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남한 정치지도자중의 1인으로 격하시키고 「기본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 규정을 지역 정부간의 관계로 만듦으로써 「고려연방제」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의 發露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정상회담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정치 실체 首長간의 만남이라는 입장을 확인해야 하며, 북한의 정상회담 이용 가능성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993년 남북한 관계는 북한핵문제의 미해결, 팀스 피리트훈련 실시, 북한의 對話遲延 의도, 한국의 정권교체 등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小康局面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빠르면 5~6월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각 공동위원회의 회담이 가동됨으로써 다소 진전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 核問題

남북한은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9)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북한은 「남북정치협상회의」('73.4.16), 「대민족회의」('73.6.23),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82.2.10), 「남북 재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83.1.18), 「남북연석회의」('88.1.1), 「남북정치협상회의」('89.1.1), 「민족통일 협상회의」('89.9.28),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 협상회의」('90.1.1),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91.1.1) 등 이름만 바꾼 형태의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해 왔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가 증폭되자,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선언을 발표('91.12.18)하였다. 북한도 제1차 핵관련 대표접촉('91.12.26)에서 이전의 非核地帶化 주장을 철회, 한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일련의 접촉을 거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91.12.31)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1)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配備·사용을 금지하는 비핵 8원칙, (2)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3)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4)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5)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다.

남북한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3.14)하였으나 査察對象選定 및 사찰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참여한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1992년 12월 17일까지 13차례의 핵통제 공동위원회와 8차례의 위원접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쌍방이 연간 동일횟수의 사찰

을 실시할 것과 핵시설 및 군사기지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의 사전통보하에 상대방의 특정지역을 사찰할 수 있는 特別査察制度를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疑心同時解消原則에 입각하여 북한의 영변핵시설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한국내 모든 美軍事基地를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安全協定에 서명(1.30)한 이후 同 협정을 비준(4.9)하였고, 핵시설 및 핵개발 현황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5.4)하였다.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초보고서」에 의거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제1차 임시사찰이 실시되었고, 이후 4차례(7월, 9월, 11월, 12월)의 추가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 북한은 제2차 임시사찰 기간중 국제원자력기구와 세부적인 사찰방식을 규정하는 「보조약정」을 체결(7.10)함으로써 향후 국제원자력기구의 一般査察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밝혀졌다. 첫째, 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인 放射化學實驗室은 외부공정 80%, 내부공정 4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완성될 경우 「공장규모」의 再處理施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1990년에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셋째, 과거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던 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와 같은 유형인 북한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반도 핵문제는 韓·美 양국의 정권교체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클린턴 新政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드러날 사실을 토대로 북한 핵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한국의 新정부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북전략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5차례에 걸친 대북임시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준수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는 한·미 양국의 對北戰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3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북한의 5MW 원자로의 연료봉 채취·분석 결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5MW 원자로의 연료봉이 1987년 가동된 이후 교체된 적이 있다면 북한의 核物質 은닉 혐의와 核開發 疑惑은 增幅될 것이다.

南北韓 相互核査察 協商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립한 후인 1993년 중반에 가서야 妥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상호 핵사찰 협상에서 쌍방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국제원자력기구가 1993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6차 임시사찰시 연료봉 채취·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정할 경우, 한·미 양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相互査察制度의 確立은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核開發可能性을 인정할

경우, 북한은 상호핵사찰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喪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은 對美·日 관계개선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 軍事基地의 노출과 特別查察 제의는 수용하지 않고 非定期一般查察 수준으로 사찰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 軍備統制問題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2.18~21)에서 발효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1992년 3월 13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제7차 고위급회담(5.5~8)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이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발족(5.18)하였다.

남북한은 1992년 3월 13일 남북군사분과위 제1차회의 이후 9월 5일까지 8차례의 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불가침부속합의서 내용구성 문제를 협의하였다. 북한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실천보다는 軍事的 對決狀態解消 및 平和問題와 관련된 일반적 문제를 제기하고 불가침분야 單一附屬合意書를 작성한 뒤 이행·실천업무는 軍事共同委員會에 이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측은 당사자해결원칙, 부문간 균형추진원칙, 실천성보장원칙 등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으로 南北間 軍事直通電話 設置問題를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8차 고위급회담(9.15~18)에서

남북한은 불가침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무력불사용(제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제2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설정(제3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제4장) 등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북한이 주장한 軍事分界線 一帶에서의 무력증강 금지, 상대방에 대한 偵察 금지, 상대방의 領空·領海 封鎖 禁止, 한국이 주장한 서울과 平壤地域의 安全保障 문제 등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이를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요인을 남겨 둔채 일단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다.

한국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남북대화 진전의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상호핵사찰 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인 남북대화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미 양국은 금년도 제24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10.8~9)에서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 특히 상호 핵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訓練을 再開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南北對話를 中斷함으로써, 1992년 11월 12일 개최기로 예정되었던 남북군사공동 위원회도 무산되었다.

한편 불가침부속합의서(제12조~15조)에 따라 남북한은 문서통신 및 전화문 교환 방법에 의해서 軍事直通電話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간의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11.6)에 軍事直通電話를 開通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

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이유로 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직통전화설치는 성사되지 못했다.

향후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은 북한핵문제의 해결 여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93년 상반기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방향이 정립되고 팀스피리트훈련이 종료되면 軍事共同委員會가再開될 것으로 보이며, 군사공동위가 재개될 경우 군사직통전화설치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先軍縮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先信賴構築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1993년내에 남북간 군비통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交流·協力 分野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1992년 남북간 交易規模는 승인기준으로 10월말 현재 1억 8천만달러(전년 동기대비 23% 증가), 통관기준으로 9월말 현재 1억 5백만 달러로서(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1992년 연말까지는 1991년도 교역규모(승인기준 1억 9천만달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2년의 승인對比 통관비율은 1991년과 비슷한 60% 내외이며,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북한물자 搬入이 남북 전체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표-3> 南北間 搬出入 總計

<건수/천달러, ()은 승인대비 통관비율>

구 분	반 입		반 출		계		수 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통 관
'91	328/ 165,996	300/ 105722 (63.7)	40/ 26,176	23/ 5,547 (21.2)	368/ 192,172	323/ 111,269 (57.9)	△ 100,175
'92*	290/ 170,247	321/ 98,529 (57.9)	32/ 10,416	33/ 6,568 (63.1)	322/ 180,663	354/ 105,097 (58.2)	△91,961

출처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7호, 제16호.

* 1992년도 통계는 승인의 경우 10월 말, 통관은 9월 말 현재 수치임

通關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搬入品目에서 아연괴, 금괴를 중심으로 한 철강·금속류가 70.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멘트, 무연탄 등 광산물은 13.4%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 한국의 對北搬出品目에서는 농업용비닐, 폴리에틸렌수지 등 화학제품이 66.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금속(냉연강판)은 29.8%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에도 남북교역에서 間接交易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교역 총액에서 直交易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내로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1992년에 남북간 직교역이 성사된 사례로

는 한국약업회사와 코오롱상사가 북한산 生藥을 반입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1992년 남북간에는 의류, 가방, 신발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賃加工방식의 交易이 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賃加工방식의 交역이 1992년에는 5건 성사되었는 바, 한국측에서는 세영코퍼레이션과 삼성물산, 북측에서는 조선경공업제품수출입회사와 조선은하무역총회사 등이 참여하였다. 1992년 南北交易에 참여한 업체수가 1991년에 비해 줄어들었는 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업체수가 1991년 103개사에서 1992년 10월 말 현재 86개사로 감소하였으며, 交역규모면에서도 전체 交역액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比重이 1991년 43.8%에서 1992년 24.2%로 줄어들었다.

한편 經濟分野의 人的 交流와 관련, 1992년에는 경제협력 사업협의를 위한 接觸申請이 증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한국측 기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경제분야의 남북인적 交류 가운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7월 19~25일간 북한의 金達玄 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이 崔珏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초청을 받아 북한측 고위급인사로는 최초로 기흥, 부평, 청주, 포항 등지에 있는 주요산업시설을 視察한 것이다. 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한국 방문시 북측은 示範事業으로 남포합작공단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측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10.6~9),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投資與件과 함께 가방, 신발, 완구 등 9개

사업에 대해 개별사업별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2년 9월에는 高슴그룹의 장치혁 회장일행이 석유화학제품의 반출입 및 협력사업 협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 경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한 訪北과 북한 주민 접촉이 활발히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 경제협력사업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 1992년 1월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 일행이 방북하여 남포공단지역내 9개 경공업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방한에 대한 答訪형식으로 예정되었던 최각규 부총리의 訪北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이와같은 쌍무적 경제협력문제 이외에도 남북간에는 유엔 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관련된 多者間 經濟協力問題가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서울에서 개최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관리위원회(PMC) 1차 회의(2.27~28)에 한태혁 대외경제위원회 총국장 등 3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한국측 관계자들이 199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의 실무자회의와 평양에서 개최(5.2~3)된 두만강개발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關聯國의 입장차이 및 정치·경제체제의 상이성,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계획 자체가 1993년 말에야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2.19)에서 발효된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하여 1992년 3월 18일 이후 7차례의 본회의 등 총 16차례에 걸쳐 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한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5.5~8)에서 「경제공동위원회구성·운영합의서」를 채택하고 5월 18일 남북합의사항의 실천기능을 담당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15~18)에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교류·협력부속합의서 협상과정에서 清算決濟原則과 비관세적용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며, 향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및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등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11월 19일 개최예정이었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무산되었다.

1993년에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관련국의 정책조정이 있을 경우,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타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爭點들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우선 구체적 實踐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

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경제교류·협력 절차와 관련,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조 5항에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단계에서 이 문제는 계속 爭點으로 부각될 것인 바, 정부의 승인·허가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확실한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간에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은 비용상승·품질 및 납기에 대한 불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直接交易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에는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의 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賃加工貿易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1992년 10월 5일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함으로써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기업의 對北直接投資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社會·文化分野의 交流·協力

1989년 6월 12일 한국정부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法的·制度的 側面에서 뒷받침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을 발표한 이후 1991년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간 인적 교류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부문의 인적 교류는 1992년 10월말 현재 609명(37건)으로 1991년(89건 성사, 956명 교류)에 비해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합의서」의 발효(2.16)이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보다 經濟難 解消를 위한 經濟交流·協力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 사회문화분야의 남북 인적 교류

연도\분야	학술	문화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교통	기타	합계	
1991	건	26	8	6	13	13	9	14	89
	인원	449	209	46	86	40	21	106	956
1992*	건	13	2	2	7	4	7	2	37
	인원	148	81	2	54	24	43	256	609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16호

* 1992년도 통계는 10월말 현재 수치임.

1992년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直接交流보다 국제기관이나 해외동포들이 제3국에서 개최한 국제대회나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間接交流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東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교육토론회」(3.3~3.6)에서 한국 교육계인사들이 북한 대표와 접촉하였으며,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6.13)에서 남북한 대표들이

접촉했다. 그리고 파리에서 열린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 표기법에 관한 남북한회의」(6.16~17)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北京에서 개최된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대회」(8.20~8.22)와 「국제전통의학대회」(10.18~10.22)에 남북한의 학자가 참가하였다. 사할린에서 개최된 「통일예술축제」(8.16)에는 남북한의 대중예술단이 각각 참여하기도 하였다.

1992년 한국측 인사가 北韓을 직접 訪問한 사회·문화교류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소속 權皓景목사의 訪北(1.7~1.13)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대회참가를 위한 여성대표단 30명의 訪北(9.1~9.6)을 들 수 있다. 반면 사회·문화분야와 관련된 북한 인사의 南韓訪問은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 기독교대표단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1차 총회참석을 위하여 서울을 방문(2.15~2.19 예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북측대표단의 불참으로 분단후 북측 기독교인사의 최초 서울방문은 무산되었다.

體育交流는 1991년에 탁구단일팀구성('91.4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출전)과 남북축구선수의 평가전('91.5.8 서울, '91.5.12 평양)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북한 유도선수 리창수의 귀순('91.8)이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2년 7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키려던 한국측의 노력은 북한측의 무성의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99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後續措置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2년 3월부터 각 분과위별 회의가 개최되었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경우 1991년 11월 말까지 총 7차례의 회의와 6차례의 위원접촉, 3차례의 위원장접촉이 있었다.

제7차 고위급회담(5.5~5.8)이 개최되기까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접촉에서 남북한은 부속합의서의 수, 공동위원회의 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접촉창구문제 등을 둘러싸고 見解差異를 露呈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傘下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단일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8차 고위급회담(9.15~9.18)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팀스피리트 훈련재개에 대한 북한측의 비난으로 11월 2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1차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남북대화가 전반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고 南北對話가 再開되더라도, 북한측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附記事項으로 규정된 법적·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再舉論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진전에 장애요인을 조성하고,

최우선사업으로 從軍慰安婦問題와 일본의 역사왜곡 및 일본의 核武裝에 대한 공동대처, 이인모 송환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설사 해결되고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社會開放 여파가 큰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언론·방송교류가 북한사회에 미칠 波及效果를 우려하여 이 분야의 교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학, 순수학문분야,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민속학 등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 분야에서 자료교환 및 교환전시 등이 제한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북한이 「민족구성원의 자유 왕래·접촉실현」(「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 10조)에는 반대하면서도 平和攻勢와 統一戰線事業을 並行하는 二重的 對南戰略에 입각하여 한국측의 재야인사 및 단체들과 선별적으로 접촉·교류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북간 문화·학술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접촉창구문제가 심각한 爭點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다. 離散家族問題

1992년 남북한 이산가족 접촉은 79건(89명)으로 1991년(105건, 122명)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이산가족 접촉은 주로 書信交換(약 90%)과 제3국에서의 相逢(약 10%)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방문에 의한 相逢은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은 離散家族問題를 우선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제6차 고위급회담(2.19)시 寒食고향방문단교환과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3.18)시 단오절고향방문단교환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의 거절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합의(노부모 100명, 예술단 100명, 기자·지원인원 70으로 방문단구성)함에 따라 이를 위하여 1992년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8차례의 적십자실무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1차 실무접촉(6.5)때부터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노부모방문단교환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깨고 고향방문단교환과는 관련이 없는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연계철회, 이인모 송환 등을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였으며, 6차 실무접촉(7.20)때부터는 포커스렌즈훈련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8.15 노부모방문단교환은 성사되지 않았다.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노부모방문단 문제가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이인모송환과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차례(10.1, 10.5)의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별도로 가졌다. 代表接觸에서 한국은 이인모 송환과 함께 노부모방문단 교환, 이산가족고향방문의 정례화,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동진호 납북선원 12명 송환 등을 병행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진전이 없었다.

1993년 중반 이후 남북대화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 한국은 적십자회담의 再開를 촉구하고 제7차 고위급회담의 合意事項인 8·15 노부모방문단교환 및 고향방문단교환의 정례화 문제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와함께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판문점 면회소설치(「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5조 3항)와 이산가족의 생사·소재확인, 서신거래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人道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일단 豫備會談에는 응하되, 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철회, 이인모송환, 한·미군사 훈련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당시 국내의 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제조건을 추가함으로써 赤十字 本會談의 개최를 사실상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고향방문, 노부모상봉 등은 북한의 가장 취약점인 사회 개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991년 9월 17일 유엔동시가입이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간 접촉이 증가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남북관계는 協力과 葛藤이 병존하는 樣相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1992년 2월 1일 제네바에서 한국의 박수길 대사와 북한의 이철대사간 접촉이 있었다. 이 접촉에서 이철 북한대사는 우리측이 제안한 월1회 大使間 定例協議를 수락했을 뿐만 아니

라 參事官級 接觸도 제안하였으며, 향후 협력분야로서 從軍 慰安婦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일본의 核武裝 견제, 「비핵화 공동선언」의 英文本 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은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4월 10일 남북한 駐제네바 대사간 2차 접촉에서 이철 북한대사는 국제회의에서의 事前 立場調整 및 협조에 관한 한국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남북직교역문제를 GATT에서 공동대처하자는 한국측 제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북한이 GATT 회원국이 아닌 만큼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북측의 제의에 따라 1992년 7월 7일 유엔주재 남북한 대사간 접촉이 있었다. 同 接觸에서 북측은 남북한이 일본의 平和維持活動法案 및 남북한의 유엔기구 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유엔總會 基調演說과 관련, 유엔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환영하며, 다만 남북한이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밝힐 문제는 특정의 제3국을 공동으로 공격하는 방향보다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건설적인 방향의 意見表明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유엔기구내 理事國 進出問題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에 동의하였다. 북측이 남북한 대사간 접촉 제의에 호응하였던 배경에는 북한의 대미·일 수교교섭에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고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한은 「한글의 로마자 적기를 기제로 하자는 남북한 모임」의 제5차 회의(6.16~17, 파리)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 국제표준화에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한글의 로마자表記 單一化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共同副應이라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또한 남북한은 제6차 유엔地名標準化會議(8.26~9.3)에서 東海 名稱改稱案을 共同提案함으로써 유엔산하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유엔가입 이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南北間 葛藤樣相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북한측이 6월 28일 이인모의 처 및 딸 명의로 유엔人權事務局(Center for Human Rights)에 이인모 송환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유엔인권사무국은 이인모 송환요청 진정서가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음을 한국 정부에게 알리고 의견제출(11.15 限)을 요청하였다. 同 진정서에 대한 심의는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人權理事會에서 1993년 3월 있을 예정이며, 인권이사회의 권고가 채택되기까지는 통상 1~2년이 소요될 것인 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意見對立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박길연 북한 駐유엔대사 명의로 유엔軍事停戰委員會(NNSC)의 기능정지에 관련된 서한을 유엔安全保障理事會 의장에게 제출(9.28)하고, 同 書翰을 이사국에 배포하

였다. 同 書翰의 要旨는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유엔군 중에서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의 署名當事者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닌 남한측 將星이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에 기인하며, 미국이 남한측 장성을 軍事停戰委 수석대표로 임명하려면 최소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軍事停戰委員會 機能과 관련된 남북한간 攻防은 1993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문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남북 관계를 검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대표는 1992년 10월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안보) 일반토의 및 본회의의 國際原子力機構 보고서 관련 토의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측 대표는 3차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 북한의 核開發에 대한 疑惑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 진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비핵화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核武器 및 核基地 사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의 同數主義 및 강제사찰 주장으로 核查察規程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측 대표인 柳宗夏 駐유엔대표부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에게 國際原子力機構 查察 繼續과 아울러 相互主義와 特別查察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하고 비핵화선언에 따라 核再處理施設을 포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1993년에도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측의 정치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간 상호핵사찰 및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를 둘러싼 南北對立이 국제무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992년도 主要事件日誌

1. 1 金日成, 新年辭 발표
 - 3대 革命 강화, 당과 인민의 一心團結 강조, 자립적 민족 경제 강화, 有關國의 「기본합의서」 존중 및 협조 요구, 反帝 투쟁 강화
1. 2 濠洲방문 부시 美대통령, 亞·太地域 美軍 계속 주둔의사 표명
美國 國防部, 韓國 공식요청시 '92 T·S훈련 중단의사 표명
러시아·우크라이나, 價格自由化 실시
1. 3 美·러, 國交 수립
訪中 와타나베 日本 外務, 北韓 核査察 위한 中國측의 영향력 행사 요청
1. 4 부시, ASEAN의 東아시아 經濟그룹 결성 구상에 대해 반대 의 사 표명
美 웨스팅社, 유엔환경계획(UNEP)에 DMZ 環境公園 조성 보고서 제출
- 板門店 동쪽 低지대와 江原道 동부 산악지대 대상
1. 5 부시, 韓國 訪問 (~7)
- 韓·美 頂上會談: 非核化 실현 공동 노력, 통일문제 南北 當事者 解決 강조, 韓·美 經濟協議會 構成 등에 합의
1. 6 韓國·앙골라, 大使級 외교관계 수립
回教國間 經濟協力機構(ECO),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등 舊소련 3개 회교국 회원가입 결정

1. 7 韓國 國防部, '92 T·S훈련 中止 발표

李鵬 中國總理,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회의 연설에서 改革 再推
進 선언

부시, 日本 訪問 (~10)

— 美·日 頂上會談, 東京宣言과 行動計劃 발표

* 東京宣言: 美·日관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APEC범
위내에서의 아시아 시장개방 확대 등

* 行動計劃: 일본의 시장개방 확대, 북한의 非核化 조속
이행 촉구

1. 9 北韓·우크라이나,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 北韓의 修交國수 113개국

1.10 盧泰愚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 비무장지대 및 중·소 國境地帶에 合作공장 설치추진, 이
산가족 고향방문 추진 표명

1.11 벨로루시, 舊蘇軍을 일부 인수 獨自軍 創設기로 決議

李鵬 총리, 訪中 다나베 日 社會黨委員長에게 北·日修交 적극
지원 의사 표명

1.12 모스크바市民 5만명, 反열친 및 蘇聯邦 복원 요구 示威

日本 政府, 從軍慰安婦問題 첫 공식시인

1.14 南·北 直交易에 따른 북한 무연탄 2만여톤 仁川 입항

1.15 게이츠 美 CIA 국장, 北韓의 核武器 生産施設 完備 발언

지비차 우크라이나軍 參謀總長, 자국 영토내 舊蘇軍의 戰術核
통제 선언

— 黑海艦隊 관할권도 주장

中國 國務院, 55개 대기업 自律化 조치 단행

- 1.16 미야자와 日本總理, 韓國 訪問 (~18)
 - 韓·日 頂上會談: 北·日 修交를 北韓核과 연계키로 합의
- 1.19 日 自民黨, 日本의 國際役割增大 方案 發表
 - 自衛隊 海外派兵을 골자로 하는 PKO法案 등
- 1.20 金宇中 대우회장 訪北, 金日成 面談
- 1.22 北韓 金容淳 노동당국제부장, 美國 뉴욕에서 켄터 미국무부 차관과 회담
 - 북한의 핵문제 등 양국간 주요사안 논의
- 1.23 클레퍼 美國防情報局長, 上院 군사위 청문회에서 2~3년내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 언급
- 1.24 訪北 金宇中 대우회장, 金達玄 북한 부총리와 南浦工團에 9개 공장 建設키로 합의
 - 30만평 공단규모, 200만평까지 확대
- 1.25 벨로루시, 戰術核 러시아 移轉 시작
 나자르바예프 카자흐大統領, 核武器 러시아 移管 拒否
- 1.26 北·中, 貿易協定 체결
- 1.28 北·벨로루시, 經協 촉진위한 常設委員會 설치협정 체결
 - 1993년부터 양국 무역을 국제가격 및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
 부시, 年頭教書 발표
 - 전략핵(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機 등 포함) 생산중단 선언
- 1.29 韓·우즈베크,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 1.30 北·日, 北京에서 第6次 修交會談 개최
 열친 訪英, 美·러 先例에 따른 英·佛·中의 核감축 촉구
-

2. 1 부시-엘친, UN안보리 정상회담시 非公式 會談
 - 美·리가 友邦國임을 확인
 - 戰略核武器의 추가 減縮 합의
 미야자와, UN연설에서 安保理 常任理事國 참여 의사 표명
2. 5 北韓 中央人民委員會·最高人民會議 常設聯合會議, 「非核化共同
 宣言」 공식 승인
2. 7 南北韓,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
 서」 가서명
 러시아·프랑스, 友好條約 체결
 EC 외무장관회의, 유럽정치통합협정인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2. 8 南北韓, 板門店에서 豆滿江지역개발 관련 첫 實務接觸
 - 서울개최 UNDP주관 豆滿江지역개발 제1차「계획관리위
 원회」(2.26~3.2)에 北韓대표 참석문제 논의
 駐제네바 南北韓大使, 南北韓 無關稅 直交易 논의
 統一院, 大字의 南浦合作工團 설립 관련 對北 협력사업자 등록
 신청 승인
 北韓·우즈베키스탄,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합의
 美國 貿易代表部, 南北韓교역을 內國間交易으로 인정할 방침
 시사
- 2.10 韓國, 투르크멘·우크라이나·벨로루시와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 2.12 中國 錢其琛외교부장, 經濟協力 논의차 베트남 공식 방문
- 2.13 北韓·아르메니아, 外交關係 수립
 美國·CIS, 地中海에서 첫 合同訓練
 - 美 제6함대, CIS 흑해함대 참가
- 2.14 高基俊 조선기독교도 연맹 대표단장,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41

- 차 총회참석 취소
- 러시아·우크라이나, 修交條約 서명
- CIS 頂上會談, 統合軍 창설에 異見
- 우크라이나·몰도바·아제르바이잔 제외 러시아 등 8개국
참여 합의
- 2.15 韓·中, 三江平原 合作開發 協定 서명
- 2.17 盧大統領, 「基本合意書」 및 「非核化共同宣言」 서명
- 2.18 제6차 南北 高位級會談 평양에서 개최 (~21)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
- 2.21 韓國·아르메니아, 國交 樹立
- 北韓·美國, 北京에서 제19차 참사관급 접촉
- 北韓産 스커드미사일 적재화물선 시리아로 航海
- 美 國務部, 中國의 미사일수출규제협정 준수방침 따라 貿易制
裁 解除키로 결정
- UN安保理, 平和維持軍 유고派兵 決議案 승인
- 2.24 국제원자력기구, 北韓의 核安全協定 4월 비준 촉구
- 美·中, 北京에서 中國의 무역장벽 완화 協商 再開
- 2.25 吳昌林 북한 외교부 대사, 4월 核安全協定 비준, 6월 核査察
가능성 표명
- UN安保理, 北韓 核査察 不應시 制裁 가능성 시사
- 중국, 南沙群島와 釣魚臺 등을 자국영토로 규정하는 「영해법」
제정
- 2.27 UNDP, 豆滿江地域開發計劃 제1차 計劃管理委員會(PMC) 會議
서울에서 개최 (~28)

- 北韓 대표단(단장: 한태혁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총국장), 先鋒·羅津 經濟特區 外國人投資 100% 허용 방침 표명
- 릴리 美 國防次官補, 亞·太安保會議에서 美國의 亞·太安保 원칙 6개항 재확인
- 美國의 아·태지역 개입보장, 적정수준 전방배치 전력 유지, 해외기지 유지, 동맹국 책임분담 확대, 보완적 방위 협력, 쌍무적 안보동맹

2.29 레만 美 軍縮局長, 北韓核 문제 협의차 訪韓

-
- 3. 1 盧大統領, 3.1절 기념사에서 北韓 核査察 수용 촉구
러시아, 農地文書 농민에게 發給 시작
 - 國유지의 私有化 전환조치 일환
 - 3. 3 北·러, 평양에서 1992~1993년 兩國間 軍事協力에 관한 文書에 서명
 - 3. 4 리스카시 駐韓 美軍司令官, 上院 軍事委 증언
 - 北韓이 1992年 여름 核物質 생산, 1994年 運搬體系 완성 가능 발언
 파월 美 合參議長, 下院 外交委 증언
 - 北韓의 南侵재발시 단순방어 아닌 축출방침 언명
 - 3. 5 中·러, 貿易·經濟協力 協定 서명
 - 3. 7 러시아, 食品 및 生必需品에 대한 價格自由化 실시
 - 3. 9 제1차 南北 政治分科委員會 第1次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中國, 核擴散禁止條約(NPT) 서명
中國, 共產黨 政治局 全體會議(~10)개최
 - 鄧小平의 改革政策路線 지속 결정

- 3.11 美 上院, 北韓의 對시리아 미사일 수출행위 비난 결의문 채택
- 3.12 韓·美, 1995년까지 韓國의 防衛費 分擔수준을 駐韓美軍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 1로 增加시킨다는 원칙 재확인
 - 1992년 1억8천만달러에서 1995년 2억8천만달러
- 3.13 제1차 南北軍事分科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社會主義 商業法」 및 「都市經營法」 채택
 CIS, 舊蘇聯 外債 공동 상환에 합의
- 3.14 솔로몬 美 國務部 東亞·太次官補, 北韓의 核問題를 포함한 對北政策 협의차 來韓
 中國 軍部, 鄧小平의 改革路線 支持 공식 표명
- 3.18 제1차 南北交流·協力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北韓·美國, 北京에서 제20차 참서관급 접촉
 코지레프 러시아 外務長官 訪韓 (~19)
 - 北韓核 해결에 전폭지원 의사표명
 - 韓國과 軍事協力 용의 표명
- 3.19 제1차 南北核統制共同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솔로몬 美 國務部 東亞·太次官補, 北韓 核査察 실현시 北·美 고위급회담 상설화 방침
- 3.20 南北韓,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을 UN에 共同提出
 北韓, 南韓에 從軍慰安婦 問題와 관련 共同委 구성 제안
 CIS 頂上會談, CIS統合軍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에 合意
 - 軍事關係 설정 및 共同防衛와 相關한 6개항 採擇
 中國 제7기 5차 全國人民代表大會 개막 (~4.3)
 - 李鵬총리, 「정부공작보고서」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환영,

對북한 우호관계 의례적 언급

— 鄧小平·江澤民지도노선 견지 및 지속적 改革擴大

- 3.21 부시-콜 독일수상, UR타결을 위한 協商 再開와 유럽내 美軍의 계속 주둔 합의
- 3.22 러시아·우크라이나, 核武器 廢棄 監視할 CIS 4개국 共同委 구성에 합의
- 3.23 韓國·아제르바이잔, 大使級 外交關係수립
- 3.24 韓國, 14대 총선실시
- 3.26 韓國, 제9차 韓·日 高位政策協議會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요구
- 3.27 제1차 南北政治分科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 3.28 中國, 향후 중국내 商品展에서 韓國의 국호, 국기, 국가 및 국가문장 사용 허가방침을 韓國에 공식 전달
- 3.29 한시해 祖平統 副委員長,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南北 共同對應 촉구
- 3.31 솔로몬 美 國務部 東亞·太次官補, 北韓 核査察 6월 時限 촉구
美國 貿易代表部, 韓·日 포함 不公正 貿易國 43개국 선정
-
4. 1 포드 美 國防部 次官補, 下院 軍事委에서 北韓 核能力 영구 저지가 美國의 目標라고 언명
G7, 對러시아 240억달러 상당 援助合意
4. 2 그레이엄 목사 訪北, 부시의 口頭메시지 金日成에게 전달
4. 5 大宇의 北韓 南浦공업단지건설 합작사업 실무조사단 訪北 신청 承認
4. 6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 訪日, 미야자와 총리와 會談
— 北·美, 北·日 관계개선이 아시아의 緊張緩和에 有益하다는 데에 동의

- 日王의 訪中 재요청
-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 표명
- 北韓·美國, 북경에서 제21차 참사관 접촉
- 미국, 북한의 北·美 관계개선 요구에 대한 답신 전달
- 4. 8 北韓, 最高人民會議 제9기 3차 會議(~10) 개최
 - 92년도 예산심의: 예산총액 395억원(전년대비 6.2% 증가)
 - 헌법수정안 긴급의제로 채택
 -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비준
 李相玉 외무장관,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 참석위해 중국방문(~17)
- 4. 9 美國 議會, 北韓 核開發 은폐시 空中爆擊 가능성 검토
 - 조사국작성 「북한의 핵개발계획 보고서」 내용
 北韓·美國, 북경에서 제22차 참사관 접촉
- 4.10 田仁燦 북한 빈주재 大使,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
 게 핵안정협정비준서 공식전달
 열친, 인민대표대회에서 연내 總理職 辭任과 급진적 經濟改革
 措置 緩和 언명
- 4.11 韓·中, 북경에서 韓·中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 4.12 金日成, 워싱턴타임즈紙 기자회견
 - 對美修交 희망
 - 金正日이 실질적 統治者임을 최초로 언급
- 4.13 北韓, 金日成에게 ‘大元帥’ 칭호 授與 결정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 平壤訪問(~17)
 일본 자민당·사회당 대표단 방북
- 4.14 미국, 밀 15만t 북한에 수출
 북경에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개최(~23)

- 4.15 美國 國務部, 北韓에게 핵사찰 수용외에 人權改善, 미사일 輸出中止 등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
- 4.18 제2차 南北交流·協力分科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 4.20 김일성 80회 생일참석 68개국 共產黨·勞動黨 대표, 社會主義 옹호 내용의 「平壤宣言」 발표
- 4.21 북한, 金正日, 吳振宇에게 元帥칭호 수여 결정
- 4.26 G7 經濟長官會議, 러시아에 240억달러 緊急支援 확정
- 4.27 제3차 南北交流·協力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韓·타지키스탄,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유고聯邦議會, 新유고聯邦共和國 창설내용의 新憲法 선포
IMF·IBRD, CIS의 正會員 가입 승인
- 아제르바이잔 제외 14개 공화국 IMF 가입
-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멘 제외 13개 공화국 IBRD 가입
- 4.28 미·일, 레이저방어 무기체제 공동개발 합의
미국 카네기재단 연구원 일행(셀릭 해리슨, 아놀드 스펙터 등 4인), 북한방문
- 4.30 韓·탄자니아,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
5. 1 중국, 한국국기 게양 한국선박 입항 허용
5. 2 韓·中, 북경에서 投資保障協定 체결
5. 3 중국, 舊소련 무기 대량 구입방침 결정
5. 4 北韓, 「核報告書」 국제원자력기구에 첫 제출
중국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 50만 감축 결정 발표
체니 美國방장관, 「1994~99 회계년도 국방계획 지침」 발표
5. 5 제7차 南北高位級會談 서울에서 개최 (~8)
- 광복절 전후 離散家族 노부모방문단 교환 합의

- 板門店連絡事務所 설치·운영,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 交流·協力 등 3개 共同委 구성 合意
- 제8차 고위급회담 9.15~18 平壤에서 개최 함의
- 5. 6 北韓 崔鼎舜 원자력공업부 의사국장, 플루토늄생산 첫 시인
- 5.11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事務總長, 寧邊 核施設 查察위해 訪北 (~16)
- 5.12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 회의, 평화의 집에서 개최
한국, 북경에서 대한민국 상품전람회 개최 (~16)
 - 중국, 한국에 정식국호와 국기사용 허가
- 5.13 北韓, 美軍遺骸 15구 UN군사령부에 인도
北·日, 제7차 수교회담 北京에서 개최 (~15)
 - 北韓側: 북한의 領土 管轄權이 休戰線 以北임을 첫 인정
 - 日本側: 南北韓 相互核查察 촉구
- 5.15 CIS, 韓國 10개 은행단에 借款利子 支給不能 통보
- 5.19 韓·美, 韓美野戰司 7.1자로 解體하기로 합의
솔로몬 美 國務部 次官補, 北韓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南北 相互核查察 수용시 북한과 정기 고위급회담 용의 표명
- 5.20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북경 방문
- 5.22 한·러,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중국, 대규모 핵실험
美 國防部, 韓國內 2개 基地포함 63개 해외 미군기지 減縮 또 는 閉鎖 예정 발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콜 독일수상, 95년까지 獨·佛合同軍 創 設 위한 協약에 서명
- 5.23 미국과 CIS 핵보유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행위한 의정서에 서명

- 美 國防部, 「국방계획지침」 최종안 발표
- 「유일강대국」 전략방안 수정
 -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군사협력체제 강조
- 5.25 국제원자력기구 核査察團,北韓에 대한 핵사찰 시작 (~6.5)
- 제4차 南北軍事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 러·중, 중국북부 접경지역 군병력 상호감축 시행
- 5.26 北韓·오만, 大使級 外交關係 수립
- 서울에서 중국상품전람회 개최(중국국기, 국호사용) (~6.1)
- 5.27 제5차 南北核統制共同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 5.28 美國 自由聯合代表團(전직 하원의원 등), 북한방문
-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 대표단 접견에서 兩國 關係改善 希望
-
6. 1 金日成, 訪北 美 자유연합대표단과 회담시 양국관계 改善 希望
- 북한·미국, 북경에서 제23차 참사관 접촉
- 러시아,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6. 2 美 國務部, 북한이 南北相互核査察 거부시 북·미관계 개선불가
- 표명
- 덴마크, 國民投票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否決
6. 4 延亨默 北韓總理, 鄭元植 總理에게 전통문 발송
-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거부 시사
- 美 下院, 核實驗 1년간 全面 禁止案 可決
- 엘친, 러시아의 獨自的인 國境守備隊 창설 발표
- 楊白氷 중국 중앙군사위 비서장, 평양 방문 (~11)
6. 5 제1차 南北赤十字 실무대표 접촉
- 리우 地球頂上會談, 「生物多樣性協約」 서명

6. 8 미·러, 전략핵무기 추가감축협상(워싱턴)에서 핵탄두 50% 감축 합의
6. 9 제5차 南北政治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韓·美, 호놀룰루에서 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SCM) 실무분과 위원회 (PRS) 개최 (~11)
 - 北韓 핵문제 해결시까지 駐韓美軍 2단계 감축계획 유보 재확인
- 6.10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北韓 영변에서 대형 재처리 시설 건설 확인
- 6.12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8.25~28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서울·평양 동시교환 합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 (~14)
- 6.14 中國 國務院, 廣州에 自由貿易地帶 설치 결정
- 6.15 日本 衆議院,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 확정
- 6.16 부시-엘친, 워싱턴에서 頂上會談 개최 (~17)
 - 투자협정 체결, 미·러 戰略核 70% 감축 합의
 - 北韓에 南北相互核査察 촉구
 美 상무부,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시 미정부 사전 면허대상국에 북한 포함키로 결정
 러시아, 세계은행(IBRD) 가입
- 6.17 中國, 楊子江 연안 武漢·重慶 등 21개 도시 對外開放 결정
 中國, 5年內에 원자재에 대한 국가 價格統制 廢止 결정
- 6.19 제5차 南北軍事分科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 6.22 제3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
 延亨默 북한총리, 을사·정미조약 共同對處 제의 對南편지 발송

- 릴리 美 國防次官補, 뉴욕에서 許鐘 駐유엔 北韓代表部 副대사와 회담
- 南北韓 相互核査察 수용 촉구
 - 리비아 등 중동국가들에 대한 스킨드미사일 수출중지 요구
- 6.23 중·러시아, 「핵융합」 공동연구 추진
- 6.25 러시아, 제2단계 經濟改革 3개년 計劃 발표
- 경제자유화, 민영화 등
- 6.26 제5차 南北交流·協力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 6.27 EC 12개국 頂上會談(리스본), 유럽統合 연내비준 등 3대원칙 재확인
- 6.29 한·러 외무장관회담, 양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확정
- 월포비츠 美 國防次官, 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 지속 표명
- 6.30 제6차 南北核統制共同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 엘친, 訪러중인 李相玉 외무장관과 회담
- 北韓에 대한 러시아의 核技術移轉 不許입장 표명
-
7. 1 韓·日, 貿易不均衡 시정 위한 「實踐計劃」 발표
- 서울과 東京에 각각 10억엔 목표의 「韓·日技術協力財團」 年內 설립 예정
- 盧大統領, 北韓의 核武器開發 계속되는 한 南北頂上會談 추진 不必要 의사 표명
- 북한·미국, 북경에서 제24차 참사관 접촉
-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 원자력 기술제공시 방사화확실험 실 폐기 용의 표명

부시-미야자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통한 핵의혹 해소전에는 對北關係 개선이나 경제원조를 하지 않기로 합의

러시아, 루블貨를 兌換通貨로 전환

7. 2 제6차 南北政治分科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미야자와, 아시아에 「多國間 安全保障機構」 창설 견해 표명

7. 4 제6차 CIS 頂上會談, 經濟法院설치와 共同核防衛 위한 情報體制 마련키로 합의

7. 7 鄭元植總理, 延亨默 北韓總理에게 서신 발송

- 고령 이산가족 歸還·定着문제 우선협의 제의
- 남북자와 월남자 등 他意에 의한 이산가족 生死확인·상봉·왕래 협의 제의

G7 頂上會談, 북한 핵문제 해결 대책 포함한 「政治宣言」과 「議長宣言」 발표

- 政治宣言: 국제원자력기구의 核査察制度強化와 의심지역에 대한 特別査察 실시
- 議長宣言: 南北韓간의 효과적인 相互査察 실시

국제원자력기구 核査察팀, 2차 임시사찰 위해 평양도착

7. 8 제4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北側: 李仁模 송환을 이산가족 故鄉訪問의 前提條件으로 제시
- 南側: 故鄉訪問 문제와의 連繫 不許

솔로몬 美 國務部 東亞·太次官補, 下院 外務委 청문회에서 北韓 核 관련 證言

- 相互査察은 美·北間 關係改善의 前提條件
- 核再處理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운용은 「基本合意書」 위

- 반이므로 즉각 해제 요구
- G7 頂上會談, 「경제선언」 채택
- 세계경제의 고도성장 위해 공동노력 합의
 - UR협상의 조기 타결 합의
- 7.9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의 개최(~10)
- CSCE의 平和維持機能을 제도화한 「92년 헬싱키문서」 채택
- 7.13 립팍 92 합동군사훈련 개시 (~27)
- 한, 미, 일, 濠, 加 등 5개국 참여
- 부시, 核武器 제조목적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生産中斷 선언
- 中國, 國營工場株式중 51%의 支配持分을 外國企業에 판매토록 허용
- 제5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7.15 북한 中央人民委員會, 貨幣改革위한 政令발표
- 7.16 제6차 南北軍事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 7.17 美 國防部 및 美·日 安保協議會 공동실무회담, 1996년 이후 2000년까지의 東아시아 주둔 美軍규모를 1995년 수준으로 동결 결정
- 7.19 金達玄 북한 부총리겸 대외경제위 위원장, 서울 방문 (~25)
- 일본, 1992년도 對中借款 1,373억엔 제공 합의
- 1994~95년중 8,600만 달러 제공 합의
- 일본, 세계 최대의 핵재처리시설 건설계획 추진 (日本經濟)
- 7.20 政府, 북한의 핵문제와 對北經協 연계방침 재확인
- 제6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訪問團 規模에 合意
- 단장포함 241명, 예술단 공연회수 2회
- 7.21 제7차 南北核統制共同委 會議, 통일각에서 개최

- 미국, 대만에 3척의 戰艦 입차 결정
- 7.22 한·미, 1993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 22% 증액 잠정합의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事務總長, 美下院 3개 小委가 共同개최
한 聽聞會에서 北韓 核開發 관련 證言
- 은닉된 장소에서 核物質 生産 可能性 언급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개최 (~24)
- 7.24 盧大統領, 金達玄 北韓 副總理 접견
美, 日, 유럽 등 주요국가들, COCOM의 規制緩和對象에서 北
韓, 中國, 越南을 제외하기로 결정
- 7.25 제7차 南北赤十字代表 實務接觸
崔珪圭-金達玄會談, 崔副總理와 南浦경공업단지 調查團이 각
각 9월초와 8월중 訪北할 것에 合意
- 7.26 아세안 擴大外務長官會議, 特別查察 포함한 南北相互查察 실현
시키기로 합의
- 7.28 제6차 南北交流·協力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美 國防部, 「亞·太戰略報告書」발표
- 駐韓美軍 계속주둔
- 1994년말 이전에 韓美聯合司의 해체여부 결정
러시아 외무부, 「조·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유지 발표
- 7.29 韓·러 軍事分野交流 확대 합의
-
8. 1 北韓, 金正日主義 용어 사용 (중앙방송)
8. 3 프랑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공식 선언
美 上院, 1996년까지 核實驗 完全禁止 내용의 法案 통과
8. 4 폴토라닌 러시아 副總理, 와타나베 日 外相과 회담

- 2개의 북방도서 日本返還을 규정한 1956年 「日蘇공동선언」의 러시아 계승 언급
- 8. 6 미 하원, CIS에 대한 원조계획 승인법안 통과
- 8. 7 제8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8. 8 中國·우크라이나, 經濟·貿易協定 체결
- 8.12 美國,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창설
- 8.15 盧大統領, 8.15경축사에서 離散家族訪問 定例化 對北 제의
- 8.16 열친, 김일성에게 친서통해 南北韓關係 改善과 核武器開發中止 촉구
- 8.17 錢其琛 中國 外交部長, UN亞·太地域軍縮 및 安保세미나(상해) 개막연설에서 평화보장 위한 5개항 제의
 - UN헌장준수, 패권추구 및 집단군사기구가담 포기, 군비경쟁 포기, 선린관계 발전, 경제협력 강화
- 8.20 日本 16개 기업·단체, UNDP 두만강유역개발 지원 위해 「北東亞細亞 經濟委員會」 구성
- 8.24 李相玉 외무장관과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韓·中 修交協定書와 共同聲明에 서명
 - 상호 국가승인 및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 한국, 中國을 唯一한 合法政府로 승인
 - 중국, 한반도의 平和統一을 지지
- 8.25 江澤民, 中·北간 우호관계 지속 재확인
- 8.26 盧昌憲 外務次官-파노프 駐韓러시아大使, 「韓·러 基本關係條約」가서명
 - 부시, 이라크 南部에 「飛行禁止區域」 설정 公式 發表
 - 제7차 南北軍事分科委 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 8.30 중국, 병력 70만명 감축 추진 (아사히신문)
- 8.31 제8차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安全企劃部, 김낙중 등 在野인사 4명을 國家保安法 위반혐의로
 구속
-
9. 1 韓·러, 상공장관會議 개최
 - 기계공업진흥회와 러시아 방산연맹간 기술·인력 교환 합의
 - 산업기술연구원과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간 데이터베이스 연결 합의
- 제10차 非同盟 頂上會談, 자카르타에서 개최 (~9.7)
 - 北韓을 亞洲副議長長國으로 선출
 - 「共同宣言文」 채택: UN중심 世界秩序 形成 촉구, 팔레스타인과 남아공화국 국민투쟁 지지
9. 2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 평양에서 개최
 삼성물산, 북한산 면바지 1만벌 국내판매 개시
 부시 美 대통령, F16 전투기 150대(60억달러 규모) 對臺灣 판매 승인 및 대대만 무기금수 조치 해제
 일본, PKO 캄보디아 파병(총 633명) 결정
9. 3 제7차 南北 交流·協力分科委員會會議, 평화의 집에서 개최
9. 5 제8차 남북 군사분과위 회의, 통일각에서 개최
 中國 共產黨 中央軍事委, 현행 大軍區制를 撤廢하고 육·해·공군을 총괄지휘하는 統合參謀本部를 창설기로 결정
 동북아6개국, 「환경협력네트워크」 구성 합의
9. 6 한·러, 야쿠트 가스전 개발 위한 「한·러 기업협의체」 설립 합의
 - 한국과 러시아의 지분은 50대 50

9. 7 南北 交流·協力分科委 委員長 接觸

- 交流·協力分野 附屬合意書 名稱과 前文, 4個章의 題目, 70個 條項 合意

9. 8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중앙보고대회에서 「불합리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제의 北韓·美國, 북경에서 제25차 參事官 접촉

- 北韓, 美國과의 關係改善 희망 書信 전달

9. 9 北韓·슬로베니아공화국, 外交關係 수립

9.10 중국, 이란에 原電 수출하기로 결정

9.11 제4차 APEC 각료회의, 共同聲明 및 방콕宣言 채택

- 93년 사무총장 등 포함한 사무국의 싱가포르 유치 합의
- 93년 APEC 예산 2백만달러 책정 (재정분담율: 미·일 등 18%, 한국·대만 등 6.25%, 태국·말레이시아 2.5%)
- 4개항(관세조화, 통관절차 협조, 시장접근 개선, 투자규정에 관한 정보교환)의 무역자유화 실천계획 발표

옐친, 방일연기이유가 북방영토문제에 있음을 공식발표

9.12 張庭延 초대 주한 중국대사 부임

9.14 北韓·美國, 북경에서 제26차 參事官 접촉

- 미국, 핵문제 해결 없는 한 관계개선 있을 수 없다는 기본입장 서한 통해 전달

COCOM, COCOM협력협의회 초청국을 구소련과 동구로 한정하고 북한·중국·베트남은 제외

9.15 제8차 南北 高位級會談, 평양에서 개최(~18)

9.16 IAEA, 빈에서 理事會 개최(~18)

- 북한에 상호핵사찰 수락 촉구

-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문제 차기 이사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
- 9.17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 3개 분야 附屬合意書 발효
 - 부문별 공동위 첫 회담 날짜 합의 (화해공동위 11.5, 군사공동위 11.12, 경제교류·협력공동위 11.19,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11.26)
 -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에서 개최(12.21~24)키로 합의
吳昌林 北韓 外交部 大使, 核問題와 관련 IAEA 이사회에서 기자회견
 - 美軍基地 開放해야만 南北 相互核査察 수용
 - 공사중인 再處理施設은 계획대로 추진
 - 北韓 軍事施設은 相互査察 대상 아님
- 9.18 그레그 駐韓 美 大使, 北韓核 관련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강연
 - 북한 核開發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평가
- 9.19 통일원, 고려합섬의 대북한 석유화학 공장 건설 기초조사 목적 방북 신청 승인
- 9.20 프랑스, 마스트리히트조약비준 위한 國民投票에서 51.05% 찬성으로 동의
- 9.21 노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연설
 - 동북아평화회의 제의
 유엔총회, 신유고연방 축출 결의
- 9.22 이글버거 美 國務長官代理, 방한
 - 北韓의 相互核査察수용 이후에야 美·北間 關係改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천명
 와타나베 日 外相, 유엔總會 연설

- UN安保理의 機能과 構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
 - 9.23 이용만 재무부장관, 제47차 IMF 총회연설
 - 북한의 IMF, IBRD 가입 지지 표명
 - 9.25 中·러,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루비노港을 中國의 對外貿易港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에 합의
 - 9.27 노대통령, 中國 방문 (~30)
 - 부시, 의회의 對中 최혜국대우(MFN) 정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9.28 한·중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
 - 韓半島非核化에 의견일치
 - 북한 개혁·개방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요청
 - 9.30 韓·中, 4개 協定 체결
 - 투자보장협정,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과학기술협정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뉴욕주재 한국특파원과 간담회
 - 김정일의 권력승계 완료 시사
-
- 10. 1 金日成, 中國 정권수립 43주년 기념 축전
 - 江澤民·楊尚昆에게 祝電보내 北·中간 전통적 親善關係 유지 다짐
 - 10. 3 미국 아시아협회 대표단, 방북
 - 10. 4 와타나베 日 外相, 日本의 UN安保理 常任理事國 자격 주장
 - 10. 5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朝鮮外國人投資法」 채택
 - 외국인투자가의 北韓內 合作·합營 및 외국인기업 창설 적극 장려
 - 외국인기업의 경우 自由貿易地帶內에만 창설 허용

- 첨단기술 및 경쟁력 높은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우대
 - 후속조치로 「合作法」과 「外國人企業法」도 채택
- 정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관련 대북성명 발표
- 북한의 「기본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최각규 부총리의 방북(10.14~18 예정) 연기 결정
- 韓·러,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 체결
10. 6 중국, 군사사절단 (단장 賀鵬飛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장 비부장) 북한 방문
- 한국 민관합동 남포공단 조사단, 방북(~9)
10. 7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워싱턴에서 개최(~8)
- 평시작전통제권 1994년 이전까지 한국군에 이양 합의
 - 상호핵사찰 진전없을시 '93 T/S훈련 재개 결정
10. 9 한국, 베트남에 代表部 공식 개설
- UND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 「계획관리위원회」 회의 북경에서 개최(~11)
- 옵서버로 참여해 왔던 러시아 정회원국으로 참가
- 10.12 中國, 제14기 공산당 全國代表大會 개최(~18)
- 社會主義 市場經濟 공식 채택
 - 黨中央顧問委(주임 陳雲) 解體
 - 중앙위원회에서 楊尙昆, 萬里, 宋平, 姚依林, 吳學謙 등 원로 정치국원들 제외
 - 개정 黨章(黨憲)에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조항 삭제
- 10.13 政府, 민간경제인의 訪北과 對北 協力事業者 指定 전면동결
- 北韓 外交部, 韓·美年例安保協議會의 T/S훈련 재개결정 非難

- 10.15 금강산 그룹(책임자 朴敬允), 대만에 무역사무소 개설
- 10.21 玄勝鍾 總理, 북한 延亨默 總理에게 南韓 朝鮮勞動黨 事件의
시인·사과 요구하는 서한 발송
- 핵문제 및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
NATO 국방장관 회담(~22), 신방위전략인 「신정치지침」 채택
- 보유 핵무기 대폭 감축, 핵선제공격 원칙 고수
- 10.22 제9차 南北 核統制共同委 會議
ASEAN 경제장관회의 마닐라에서 개최(~23)
- ASEAN자유무역지대(AFTA) 구체화 합의
- 15년에 걸친 공동특혜관세 실시를 통한 2008년까지 역내
관세율 5%이하 감축 합의
- 10.23 아키히토 日王 방중(~28)
- 10.24 러시아의 강경 保守派, 救國戰線 창설
- 10.28 北韓, 한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과 관련 南北軍事當局者
間 直通電話設置(11.6 예정) 拒否
- 10.29 政府, 李東馥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경질
- 후임에 孔魯明 임명
- 10.31 북한 延亨默 總理, 玄勝鍾 總理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 共同委중단 위협하면서 화랑훈련(11.2~7) 및 독수리훈련
(11.3~9) 계획의 취소를 요구
-
11. 2 IAEA 제4차 核査察팀, 平壤 도착
11. 4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11. 6 韓·日, 제1차 多者經濟通常協議會 개최
- 11.12 제8차 韓·EC高位協議會, 韓國에 대한 EC의 一般特惠關稅를

93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北韓 赤十字會, 이인모의 인도주의적 송환 요구 聲明 발표

11.14 中國 共產黨, 國家財政과 經濟에 대한 黨의 指導·監督機構인 「財經小組」의 復活 결정

11.15 리투아니아 舊共產黨, 총선승리 재집권

11.16 유엔安保理, 新유고聯邦에 대한 海上 封鎖 強化 결의

11.18 제10차 南北 核統制共同委 會議

옐친, 訪韓(~20)

- 양국 정상,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 옐친, 對北韓 武器供給 中斷과 북한과의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條約」 제1조(군사 자동개입 조항) 재검토 밝힘
- 韓·러 國防長官, 「韓·러 軍事交流 計劃에 관한 양해각서」 締結
- 韓·러 經濟副總理, 「韓·러 經濟科學共同委員會」 공식 發足

11.19 러시아 最高會議 民族會議, 土地私有化法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

11.20 러시아 最高會議, 강경파 대의원들이 제출한 옐친 사퇴동의안 부결

11.22 中國, 對北韓 硬貨결제방식(1993년초 시행 예정) 延期 결정

11.23 클린턴 美 대통령 당선자, 通商法 슈퍼 301條 復活 등 「對日3 原則」 제안

中國 外交部, 韓國 7개 言論社 北京特派員의 常駐 허가

11.24 러시아 國防部 主要指揮官 會議

- 옐친, 러시아의 軍事的 地位 유지 위하여 93년도 國防豫算을 삭감치 않을 것이라고 천명

- 11.25 北韓, 舊蘇聯의 支援으로 건설중이던 4개의 核발전소에 대한
協力 재개를 러시아측에 요청
COCOM 파리의회의, 北韓·인도·이라크 등을 주된 禁輸對象國으
로 새로 규정
- 11.27 제11차 南北韓 核統制委 會議
- 11.28 가이다르 러시아총리, 한국, 중국, 대만, 이란, 태국 등 대금 지
불능력 보유한 국가에 군사 및 원자력 기술수출 촉진 방침
표명
-
12. 1 한·미, 한미연합해병사령부(CMFC) 창설, 한미연합사(CFC)의
지상 구성군(GCC)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 임명
12. 2 러시아 外務部, 外交독트린인 「外交基本構想」의 最終案 마련
- 한반도 관련내용: 한반도의 統一은 러시아에 이익이 됨
12. 4 吳昌林 北韓 外交部 大使, T/S訓練과 관계없이 IAEA 核査察
을 계속 수락할 것이라고 IAEA이사회에서 표명
12. 5 러시아 人民代表大會, 엘친의 權限縮小 겨냥한 保守派 改憲案
부결
12. 7 러시아 人民代表大會, 私有制 인정하는 改憲案을 최종 채택
12. 8 KAL機 事件 진상규명 5者會談(韓·러·美·日·ICAO) 모스크바
에서 개최
北韓·美國, 北京에서 제28차 參事官 接觸
- 12.10 제12차 南北 核統制共同委 會議
北韓 勞動黨 中央委 6期 20次 全員會議, 당·정 인사개편
- 총리에 姜成山, 국가계획위원장에 김달현(부총리 겸임)
러시아 人民代表大會, 의회해산에 관한 엘친의 國民投票 提議
를 不法化하는 法案 채택

- 12.11 北韓 最高人民會議 9期 4次 會議, 黨中央委 決定 승인
- 12.12 北韓, 延亨默 前總理를 慈江道黨 責任秘書 겸 人民委員長으로
임명
- 12.14 IAEA 제5차 核査察팀, 北韓 도착
- 12.15 러시아 人民代表大會, 체르노미르딘 現副總理를 總理로 인준
- 12.17 제13차 南北 核統制共同委 會議
열친, 中國 訪問(~19)
-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지역패권주의 배격 등 내용의
共同宣言 발표
- 12.19 金泳三 民自黨 大統領候補, 제14대 大統領選舉에서 當選
南北 高位級會談 北側 代表團, 제9차 회담(12.21~24 예정) 拒
否 聲明 발표
- 12.21 제9차 南北 高位級會談 무산
臺灣, 立法院 의원선거
- 국민당 73석, 민진당 38석, 기타 14석
- 12.22 韓國·베트남, 國交 수립
- 12.23 中國政府, 프랑스의 對대만 武器販賣에 대한 보복조치로 廣州
주재 프랑스 總領事館 폐쇄 결정